

2023

반빈곤연대활동

뺏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평등한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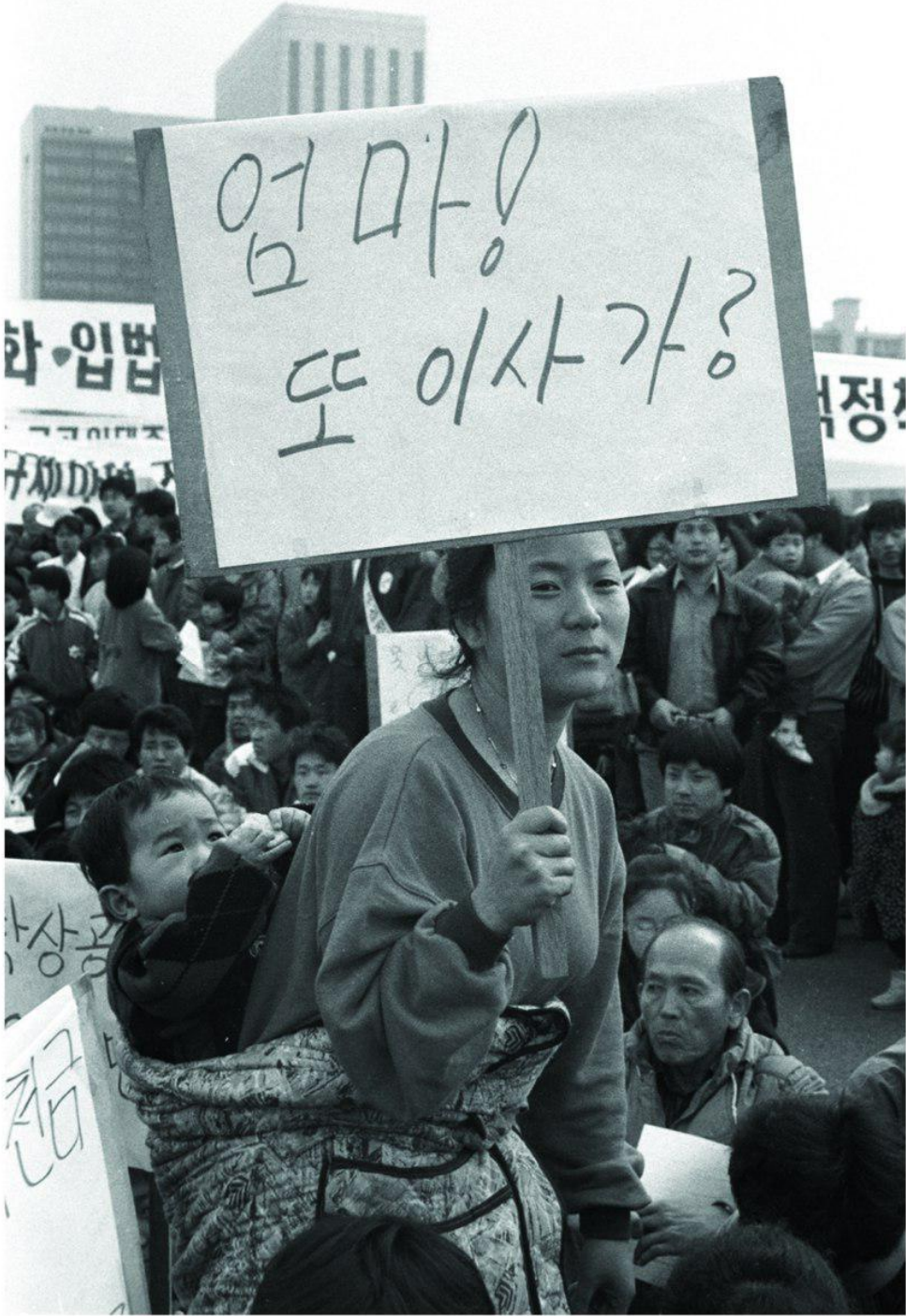
2023. 6.27-29

서울·경기 곳곳

목차

<input type="checkbox"/> 여는 글	4
<input type="checkbox"/> 평등약속	6
<input type="checkbox"/> 일정	7
<input type="checkbox"/> 기획단 소개	10
<input type="checkbox"/> 2023 빈활 주요 요구	12
<input type="checkbox"/> 지역 현안	14
<input type="checkbox"/> 교육자료 : 부동산의 도시를 주거권의 도시로!	26
<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	34
<input type="checkbox"/> 가이드 : 간담회 / 하루평가 / 선전선동	56
<input type="checkbox"/> 흥얼흥얼 노래집	66

여는 글



“엄마! 또 이사가?” 1990.03.04_박용수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

30여년 전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 선포대회에 참여한 고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말입니다. 30여 년 전 서울에서는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셋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들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17명의 세입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당시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도시개발정책으로 수많은 철거민이 생겨난 때이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남은 철거민과 무주택 세입자 등 천여 명이 모여 6월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선언을 함께 남겼습니다.

2023년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대학 기숙사는 가뜩이나 부족하고, 대학가 월세는 나날이 높아집니다. 어떤 이는 학업 시간을 쪼갠 아르바이트로, 어떤 이는 가족과 부담을 나누며, 또 어떤 이는 반지하와 옥탑, 위반 건축물에 살며 급한 곤궁을 해결하곤 합니다. 도시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은 도시 외곽에서 두,세시간의 통근시간을 감내하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비싸지는 도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한국의 주택공급은 소유주에게 이익을 독점시켜왔고, ‘살 곳’이 아닌 ‘살 것’으로, 즉 상품으로 전략한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전염병과 전쟁, 금융위기는 집을 매개로 빈민과 세입자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소유 여부를 떠나 살고 싶은 만큼,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적절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천명된 주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인되고 빼앗긴 권리이기도 합니다. ‘집은 인권’이라는 구호는 언젠가 달성해야 할 당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로 만들어야 할 최소 조건이 되었습니다.

2023년 반빈곤연대활동은 최소한의 삶의 자리마저 빼앗긴 이들과 연대하며,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집을 요구합니다. 빈환 기간 동안 마주한 다양한 빈곤 문제를 당사자와 함께 알려내고, 모두의 주거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의 규칙을 고민해봅시다. 뺏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이 도시에 더 많은 평등한 땅을 요구합시다!

2023 반빈곤연대활동은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 나이, 성별, 성적지향과 정체성, 가족 형태, 장애, 병력, 신체조건, 출신 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합니다.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합니다.
- 2023년 반빈곤연대활동 구성원은 평등약속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꾸준히 새로운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약속 실천을 위해 함께 생각할 것

- : 자연스럽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성별화된 방식의 역할분담을 하지 않나요?
-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나요? 타인의 생각에 대해 쉽게 단정짓지는 않나요?
- : 시스젠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적인 연애 및 가족, 결혼, 출산, 양육을 당연한 듯 요구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편안한 문제제기, 함께하는 문제해결

- : 상대방이 거부의를 표현하는 즉시 문제제기를 받은 당사자는 행동을 중단합니다.
- : 불편 제기는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 잘못된 행동을 마주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구성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받은 경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 빈할 기간 중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사건 해결의 일반 원칙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일정

1일차(6.27/화)	
~ 08:55	용산역 집결 (광장 계단 톨립 조형물 앞)
9:00 ~ 11:30	용산 다크투어
11:30 ~ 12:00	이동 (용산역)숙대입구역)
12:00 ~ 13:00	점심식사 (아랫마을)
13:00 ~ 14:00	소개와 나눔 (아랫마을)
14:00 ~ 15:00	이동 (서울역)소사역)
15:00 ~ 16:00	소사 마을 답사
16:00 ~ 17:00	강연 : 전철연 (대리점)
17:00 ~ 18:00	저녁식사 (보리밥집, 호프집)
18:00 ~ 20:00	평등약속 / 조별 소개 /노래 배우기 (대리점)
20:00 ~ 22:00	강연 : 부동산과 주거권 (대리점)
22:00 ~	조별평가 및 취침

2일차(6.28/수)	
~ 09:00	기상 및 조식 (보리밥집, 호프집)
09:00 ~ 10:40	조별 인터뷰 : 소사 철대위 1) 조별 만남 (40분) (대리점, 교회) 2) 참가단 토론 (30분) (대리점) 3) 전체 토론 및 질의 (30분) (대리점)
10:40 ~ 12:00	선전기획 (대리점)
12:00 ~ 13:00	점심식사 (보리밥집, 호프집)
13:00 ~ 14:00	이동 (소사역)서울역)
14:00 ~ 17:00	1) 홈리스, 쪽방 미니 강연 (성민교회) 2) 동자동 주민간담회 (성민교회) 3) 쪽방촌 마을답사
17:00 ~ 18:00	이동 (서울역)소사역)
18:00 ~ 19:00	저녁식사 (보리밥집, 호프집)
19:00 ~ 20:00	휴식
20:00 ~ 22:00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및 GV (대리점) 〈파크테일 이야기〉, 〈아현포차〉
22:00 ~	조별평가 및 취침

3일차(6.29/목)	
~ 09:00	기상 및 조식 (보리밥집, 호프집)
09:00 ~ 12:00	집회 준비 / 마을 꾸미기 (대리점 집결)
12:00 ~ 13:00	점심식사 (보리밥집, 호프집)
13:00 ~ 15:00	종합토론 (대리점)
15:00 ~ 16:30	집회 및 행진 (부천시청)
16:30 ~ 19:00	해단식 및 마을잔치 (대리점)

연락망

조별 오픈채팅방



1조



2조



3조



4조



5조

기획단 소개

빈곤사회연대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는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반신자유주의 반빈곤 연대운동을 지향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민중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합니다.

2001년 최옥란 열사는 '민중생존권 쟁취·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 투쟁을 기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활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초법 연석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의 불안정화, 민중의 빈곤화에 맞선 광범위한 도시민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2004년 3월 30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이 만들어졌으며, 2008년 4월 16일 이름을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로 바꾸어 반빈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정책, 빈곤대책으로 오히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당사자 운동과 함께합니다.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은 주택개발을 할 때 개발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선대책·후철거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며 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철거민들의 단체입니다.

주택개발은 대부분 주거문화가 낙후된 곳이 개발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며 그곳에는 대부분 건설 일용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민과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고있는 곳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인근 지역의 전·월세는 폭등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은 자체이주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영세상가세입자들도 이주 차원에서 입장과 처지는 주거세입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주능력이 없는 가난한 주민과 영세상인들을 무작정 대책 없이 쫓아낸다면 갈 곳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거민들은 대부분 노동자입니다. 철거민이란 이름의 본명은 노동자인 것입니다. 집(주거공간)은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편히 쉬며 재충전을 할수있는 곳이며 가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예비노동자인 학생들과 철거민, 노동자와의 연대는 자연적 동맹 관계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현상인 것입니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주택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가난한 노동자들과 서민·빈민들의 삶을 위해 또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량건설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발의 이익은 거대 건설자본이 아니라 당해 지역주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 환원되어야 합니다.

철거민들의 기본권인 주거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철거민들에게 깊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홈리스행동

홈리스행동은 2001년 '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로 시작한 단체로 노숙을 비롯한 극한의 빈곤

상태에 처한 홈리스 대중 스스로, 그들과 함께 권리를 찾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홈리스 상태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기인하며, 신자유주의의 금융세계화가 확대될수록 홈리스 문제는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문제를 게으름, 무능 등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인식에 반대하며 노숙은 물론 극한의 주거빈곤상태에 처한 홈리스 대중들의 조직된 힘을 통해 홈리스 상태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리스의 문화와 교육적 권리 실현을 위한 '아랫마을홈리스야학', 거리 홈리스들의 인권 감시와 상담, 지원하는 현장활동 '인권지킴이', 의료, 주거, 추모 등 정책 대응활동, 홈리스대중을 대상으로 한 월례 기관지 '홈리스뉴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동사랑방

서울역 바로 앞 용산구 동자동에는 전국 최대규모 쪽방촌이 있습니다. 동자동 사랑방은 2007년 9월부터 이곳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하며 쪽방촌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지원과 무연고로 돌아가신 주민분을 위로하는 마을 장례, 취사가 어려운 쪽방 주민들에게 천원에 점심을 제공하는 공동밥상 '식도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주민들의 주거권을 위한 투쟁과 반빈곤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에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차지하려는 토지·건물주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 발표임에도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쪽방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수십 년을 최악의 주거라 불리는 쪽방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원안처럼 추진되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쪽방 주민들이 개발로 쫓겨나지 않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2023 빈활 주요 요구

1. 주거의 권리, 생존의 권리, 노동의 권리 앗아가는 강제퇴거·강제철거 중단하라!

주거권은 주거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그 비용이 감당할 만한 수준일 때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집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2년마다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불안해야 하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집을 유지하는데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세입자들이 이토록 전전긍긍하며 살게 된 배경에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의 역사가 있다. 민간에서 조합을 꾸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합동재개발’은 땅과 집을 소유한 사람과 건설사에게는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그곳에 살던 세입자와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즉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쫓아왔다.

그 결과 집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에는 수많은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뉴타운은 ‘헌 집주면 새 집으로 돌려주는’ 사업처럼 보였지만 뉴타운 개발사업 전후 도시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사업 전후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 비율은 63%에서 30%로, 전세금 4천만 원 미만 주택 비율은 83%에서 0%로, 거주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7만 원에서 653만 원으로 변했다. 뉴타운 지역에 거주 중이던 67%의 세입자들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한국은 매우 잔인한 강제퇴거 폭력을 허용해왔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 2018년 발생한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은 강제철거·강제퇴거가 낳은 비극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땅과 집을 소유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있다. 집과 가게를 함부로 철거하는 것은 주거의 장소, 생존의 장소, 노동의 장소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개발이익만을 위한 강제철거·강제퇴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주민을 위한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서울의 5개 쪽방촌은 모두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자동 쪽방촌은 1978년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40여 년 간 개발이 정체되어왔다. 개발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소유주들이 더 큰 개발이익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것이 있다. 이렇듯 쪽방촌 개발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민간주도 개발의 경우, 개발의 첫 목표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있는 탓에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주민을 축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이주비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함은 물론, 강제적인 퇴거 폭력에 노출되어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장’이 법령에 근거한 사업 목표이며, 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과 큰 질적 차이를 보인다. 개발이 진행되는 중에도 주민이 생활환경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순환식 개발 방식은 도시 개발의 좋은 대안 중 하

나다. 그간 대규모 철거를 기본으로 진행해 도시의 공동화를 만들어낸 전면 철거 방식과는 다르게, 순환식 개발 방식은 주민의 생활반경 내에 선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민이 임시 이주한 뒤, 원 주거지를 개발하고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소수의 이윤을 위해 주민들이 삶의 터를 잃는 개발 방식은 이제 시효 만료다. 주민을 위한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3.

기후위기 시대, 주거는 생명이다. 주거권이 중심이 된 도시 계획 수립하라!

2022년 8월 내린 폭우로 서울에 있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두 가족이 숨졌다. 이 참사는 기후위기 시대 모든 이들의 주거권 보장이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도시가 화려해질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살 곳은 사라지고 있다.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유형 중 고시원과 여인숙 같은 비주택 거주민의 비율은 2006년 1.5%에서 2019년 7.1%로 늘어났다. 지하, 옥상, 비주택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포함한 주거 빈곤 가구는 2020년 기준 176만 가구로 전체의 8.4%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경로이자,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입자 권리 강화와 공공부지 매각 저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요구다.

지역 현안



용산 정비창 개발, 기업위한 업무지구 말고 시민위한 공공주택을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몰락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동하는 한 축에는 전체 토지 50만㎡ 중 약 70%인 35만㎡ 땅의 소유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있다¹⁾. 코레일은 부채 문제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정비창 토지의 민간 매각을 포함한 정비창의 상업 개발을 주도하려 했다.

그러나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 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주거지를 통합해 약 57만㎡로 사업부지가 확대되어 한강 중심의 서울 부도심으로 재편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대표적 사업으로 발표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공모형 PF사업²⁾으로 추진되었다.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인 삼성물산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시책사업으로 연계한다며 SH공사를 통해 490억 원을 출자했다. 삼성물산을 대표 컨소시엄으로 한 29개의 금융·건설재벌들이 재무, 전략, 건설 부문 투자자로 나섰고, 사업시행자로 만든 (주)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³⁾)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를 설립해 민간주도의 형식을 띤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사업비 31조의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고 불리며 투기를 부추겨 용산 일대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인근 재개발 지역의 빠른 개발을 자극했다. 결국 국제업무지구로부터 직선거리 30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용산4구역도 폭력적인 강제퇴거로 이어졌고,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로 귀결되었다.

용산참사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는 2010년 국제업무부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해 사업을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은 2013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기'라는 오명의 드림허브PFV 부도 선언과 구역지정 3년 내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못해 구역지정이 해제(2013.10.10.)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허허벌판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1) 한국철도공사(356,562㎡ /69.8%), 국토부(125,410㎡/25%), 한전(22,875㎡/ 4.4%)

2) 공모형 PF사업, 일명 민관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 부동산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민간 단독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회사(PFV)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는 금융기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3)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드림허브PFV도 상근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였다.

다시 꿈틀거리는 용산정비창 개발

욕망의 신기루가 무너진 정비창 부지는, 코레일과 드림허브간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고, 2018년 코레일이 승소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다시 개발이 추동되었다. 2018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예정했으나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겨 잠정 보류했다. 그러다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2천 호, 공공분양주택 1500호 외에는 분양주택과 오피스 건물을 짓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제2의 한강르네상스'를 내세우며 다시 국제업무지구로의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작년(2022년) 7월에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 몰려드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직접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전 정부의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폐기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공공개발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공공이 토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에 팔아 민간 개발로 분양형 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이 인프라를 미리 조성해줘 민간의 개발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계획이 없어, 특히 매각과 투기적 개발의 우려가 크다.

기업을 위한 국제업무지구가 아닌 100% 공공주택 공급을

가득이나 부족한 공공의 토지를 개발해, 토지 대부분과 건물을 고스란히 민간 소유로 넘겨주는 꼴인,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교통요지에 고층 상업시설을 건설해 자본의 흐름과 이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대도시 성장전략이라는, 자본주의 도시공간 구조의 도식을 벗어나는 대안적 상상을,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그려봐야 한다. 광역교통망이 교차하는 핵심요지에, 과거의 가치와 다른 우리의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상상력과 시도가, 기존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

막대한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을 이 땅에서부터 끝내야 한다. 소유로 귀결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이 보장된 공간으로 땅의 쓸모를 바꾸어야 한다. 호화로운 분양아파트와 국제업무지구의 높은 마천루 빌딩 숲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차별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서울시민들이 서로 어울릴 공공의 공간을,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실현을 통해 만들자. 소유를 넘어선 권리, 도시의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자.

소사 3구역

전국철거민연합

소사3구역은 재개발지역으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48-21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부천시청이 사업인허가권자이며 대림·롯데건설이 시공사이다. 총 1,649세대를 건설하는데, 분양 1,517세대(조합원 분양 610, 일반분양 897)를 공급하고, 임대아파트는 고작 132세대(8%)만을 건설할 계획이다. 결국 이곳에서 살던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은 무시된 채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사3구역은 재개발사업의 하나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즉, 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상가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소사3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8년 3월(정비구역 지정)이다. 뉴타운개발 욕망의 광풍이 불던 시기에 지정되어, 그해 9월 토지등소유주들의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 되었다. 뉴타운개발 바람에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은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못하다가, 다시 주택가격 폭등기인 2020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었다. 사업시행인가는 이 지역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건설할지,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주거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 즉 2008년을 기준으로 하기에 그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이 대책 대상이 되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대책에서 배제되어 그냥 쫓겨났다.

이 많은 인·허가처리를 하면서도 부천시청에서는 소사3구역의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비롯한 어떠한 협의체도 없이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까지 허가했다. 관리처분인가는 개발 비용등을 확정하는 단계로, 철거 전 마지막 인허가 단계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는 구역내 모든 토지와 건물이 조합의 소유로 귀속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결정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하기 불가능한 텅빈 수준이 찢금 보상만이 책정된다.

부천시청의 관리처분 인허가로 인해 조합은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소사3구역 주민들에게 명도소송(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처분인가로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간 상태에서 명도소송은 세입자 100전 100패 일 수 밖에 없다. 강제철거의 법적 모양만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대부분 명도소송 판결 선고를 받았고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이 주민의 대문 앞에 붙고 있다.

현재 소사3구역 전체 남은 상가와 거주자는 40여 세대, 그중 투쟁으로 생존권과 주거권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7명의 동지들이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전국 최대규모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전국 최대의 쪽방촌으로 1,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쪽방 주민 대부분은 1인 가구로 평균 1.5평의 작은방에 거주한다. 쪽방 건물은 1970년대를 전후해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위생과 관련된 시설을 십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 취사장이 있는 곳도 있으나 불편함으로 대부분 방 안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한 가스버너로 취사가 이뤄지는데 이는 늘 화재에 대한 위험과 불안이 함께 한다. 쪽방은 창문이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날씨가 따뜻해지면 쪽방은 더위가 시작되고 방에서 취사를 하면 그 열기로 인해 더 더워지게 되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게 된다. 쪽방 주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건물주들은 주민들이 노후 된 건물에서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동자동 쪽방촌 67개의 쪽방 건물 중 이러한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건물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멈춰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동자동 쪽방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건물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제도적인 문제로 시간은 흘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물도 노후 되어 갔다. 쪽방촌은 최악의 거주지로 반 지하, 옥탑보다도 못한 도시 최하 빈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2021년 2월 5일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영등포 쪽방촌의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발표 이후 대전, 부산지역 쪽방촌이 선정되었고 그로부터 일 년 후 네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개발안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확정하는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쪽방 주민들은 2026년 1월 완공 후 입주하게 된다.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개발구역 안에 조성된 이주단지에서 머물다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개발과 함께 다시 재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쪽방 주민들은 쪽방이 개발될 때마다 강제퇴거를 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은 채 또 다른 쪽방을 찾아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쪽방의 비인간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으며 도시빈민의 주거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뜻깊은 사업이다.

하지만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개발이 발표되자 토지, 건물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반대에 부딪쳤다. 동자동 재개발지역의 토지, 건물소유주 중 실거주 중인 세대는 10%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을 주민이라 칭하며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제한을 풀어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근거한 사업임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보다 투기로 재산을 지키려는 토지·건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발표가 난 후 2년이 지금까지 제자리에 멈춰 버린 것이다.

투기 말고 주거권! 동자동 주민의 주거권 실현을 향해

동자동 쪽방촌 개발 발표가 났을 때 많은 주민들은 드디어 집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좌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차라리 발표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희망고문을 받은 상황은 없을 거라고도 한다. 쪽방촌 주민들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전세임대나 매임임대로 이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지만 쪽방촌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 이곳에는 같은 형편에 함께 의지하며 살아간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집 같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다니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 이후 지금까지 50여 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났다. 쪽방촌 주민들 대부분 건강이 좋지 못해 매해 스무 명 이상 넘게 돌아가신다. 개발 발표가 났을 설레는 기쁨도 있었지만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며 씩씩한 웃음을 보였다. 실제로 그 바램이 이뤄지기 전에 많은 주민들이 세상을 떠나 그들의 바램은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욕실 있는 집에 살고 싶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 조용한 집, 깨끗한 집, 친구를 초대하고 가족을 초대하며 살고 싶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이 바램이었지만 이뤄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삶을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다.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 사업은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다. 안정된 삶을 위해 주거문제를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고 사업이다. 주거복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투기 세력의 눈치를 보며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최악의 주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울역

서울역의 첫 모습은 1900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간이역사다. 염천교 아래 논에 가설된 간이역은 당시 용산역에 비해 규모가 무척 작았으나, 경성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성역 건설로 이어졌다. 1925년 완공된 경성역은 만주방면의 국제열차가 오가는 철도 교통의 중추지가 되었다. 광복 이후 1947년에 '서울역'으로 개명한 이곳은 1957년에 서부역을 신설하는 등 규모를 확장해 갔다. 서울올림픽에 맞춰 1988년에는 민자역사가 되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거대한 유리빌딩 서울역은 2004년 4월 1일 KTX 운행이 개통되며 새롭게 생긴 민자역사다. 옛 서울역사는 86년의 운행을 마치고 2011년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문화시설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서울역 주변과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서울역 인근에는 인력사무소, 여인숙과 셋방 등 급한 일자리와 잠자리를 찾는 이들이 찾을만한 공간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차곡차곡 재개발을 거듭한 끝에 이제 쪽방은 동자동과 중림동, 남대문로5가동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다. KTX가 개통되고, 새로운 유리 건물 아래 대합실이 마련되며 노숙인에 대한 강제퇴거 역시 강화되었다. 서울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서울역 노숙인이 아닐까? 하지만 노숙인은 서울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거리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서울역은 동료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한 곳이자, 지원기관이 인근에 있는 공간인 동시에 노숙인을 내몰고 실의에 빠뜨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2005년, 서울역 거리홀리스 사망 사건

2004년 7월 10일과 11일 사이,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27세 문아무개 씨가 철도공안(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실물 보관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그의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철도공안에 의한 타살이었다. 8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발표된 뒤 노숙인인권단체는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8월 25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50일간 이어졌다. 철도청에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지, 별다른 답변은 없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서울역에서 또다시 이아무개(당시 만38세), 김아무개(당시 만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이 씨가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1월 22일 사망 당일에 공익요원들이 폐지나 짐을 싣는 손수레로 죽어가는 사람을 이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역에 몰려든 인근 노숙인 100여 명은 집기를 매표소로 던지며 두 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는 등 격렬히 항의하였고, 그로 인해 노숙인 6명은 폭력 등의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의 조사로 이들의 사망 원인은 간경화, 폐결핵으로 밝혀졌으나, 이 사건으로 공권력에 의한 지속적인 퇴거 위협, 폭언이나 강압 행위를 받아 온 노숙 당사자들의 분노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후 1월 28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서울지하철 노숙자 대책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역 노숙자 시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역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며 아래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역사 감시 활동 및 순회 점검 강화

역간부 및 공익근무요원 역사 순회 점검 1일 20회 이상 실시

당직자 순회 점검 강화

노숙자 발견 시 유관기관(구청, 경찰 등)에 즉시 조치요청

● 상습 노숙지역 물청소 실시

방노로 인한 악취 해소 및 물청소로 인한 노숙 사건차단 효과

● 관계기관(서울시, 구청 등)의 지속적인 단속 요청

● 서울시의 단속 강화 및 강제추방 등 행정조치 필요

역사 밖으로 강제추방 조치 가능토록 법적 처벌 근거 필요(인권문제 해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인 보호시설 강제수용 방안 필요

노숙자 문제는 공사 차원의 단속보다 정부 차원의 노숙자 자립 프로그램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본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대책을 통해 볼 수 있듯 지하철공사에 노숙인은 퇴거의 대상이자 강제수용, 계도의 대상이다. 의자 사이에 놓인 손잡이, 기둥 아래에 달린 문어발 같은 받침대, 광장과 역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물청소는 시설이용자와 청결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 노숙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용이 불편하도록 고안된 시설로 채워진 공간, 강제퇴거는 이렇게 고요한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2011년, 서울역 거리홈리스 강제퇴거

2011년 7월, 코레일과 서울역이 8월 1일 23시부터 서울역사 내 노숙인을 강제퇴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졌다. 많은 비판을 받자 코레일과 서울역은 이러한 계획을 '야간노숙행위금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23시 이후 노숙인 퇴거 안내 △01시 30분~04시 30분 서울역 출입문 채정(청소) △02시~07시 역사 내 진입 노숙인 출입통제(취침도구 지참 노숙인 대상 상담센터와 쉼터이용유도)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서울역 이용객의 민원과 테러의 위협에 기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숙인'이라는 집단 전체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이자 거리홈리스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위기계층의 유입창구인 공공역사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만 300여명의 거리홈리스가 사망하는 현실에서 거리 생활에 따른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한 공간인 서울역이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홈리스를 내쫓는 것은 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처다.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위 조치에 항의했다. 하지만 8월 22일로 예정된 퇴거방침에는 변동이 없었다.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1)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31.5%는 서울역의 야간노숙 금지조치 이후 퇴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야간노숙금지조치는 야간시간뿐만 아니라 주간 시간에도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해 보인다가나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역사 밖으로 내쫓는 강제퇴거를 강화했다. 이는 노숙인의 심리에도 충격을 가했다. 억울함, 막막함, 두려움, 걱정이 대다수 거리 노숙인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른 곳에서도 쫓겨날 것 같아 두렵다', '추위, 비 등을 피할 곳이 없어 걱정된다', '왜 노

숙인한테만 그러는지에 대해 억울하다'는 호소는 공공장소에서의 축출이라는 경험이 가져오는 불안과 무기력, 심리·사회적 외상을 방증한다.

2012년 4월, 서울역에 살고 있는 거리홈리스들은 홈리스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역을 주소지로 집단 전입신고를 진행했다. 당시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한다.



2012년 4월 25일 서울역 정문 앞에서 '거리홈리스 서울역 집단 전입신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남영동주민센터로 가서 서울역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집이 없어도 유령은 될 수 없다!
거리홈리스 서울역 집단 전입신고 기자회견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하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강행한지 25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지하보도에서, 쉼터에서 한 겨울 한파를 견뎌내면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거리홈리스들이 250여 일 동안 견뎌내야 했던 게 겨울 추위만은 아니었다. 홈리스들은 서울역이라는, 그 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되어온 홈리스들의 생활공간에서조차 쫓겨나는 상실감과 막막함도 견뎌내야 했다. 그 동안 서울역과 같은 공간은 이미 술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거리 생활을 하게 된 홈리스들이, 유일하게 홈리스로서 사회와 대면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이었다. 홀로 있을 때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던 홈리스들도 서울역에서는 예배를 보는 신자로,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자활근로자로, 친구들과 술 먹는 사람들로 등장할 수 있었다. 서울역이 바로 거리홈리스들의 생활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는 단지 거리홈리스들이 잠 잘 곳을, 추위를 피할 곳을 없앤 조치가 아니다. 서울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생활해 왔던 사람들을 쫓아

내는 것! 그럼으로써 홈리스들을 다시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홈리스의 존재 자체를 지워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내 야간 취침만을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미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경비용역을 동원해 역사에서 홈리스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역사에 입주한 상업시설들이 서울역 광장 계단에 앉아 있는 홈리스들을 내쫓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거리홈리스들은 서울역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 거리홈리스들이 바로 여기 서울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새삼스레 선언하고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의 홈리스 관련 정책이 제대로 된 홈리스 실태와 현황조차 구비하지 못한 채, 홈리스가 눈에 띄지 않도록 시설수용과 단속 위주의 활동을 펼쳐왔던 것 역시 홈리스의 존재를 투명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역을 떠나는 것, 탈노숙은 많은 거리홈리스들이 서울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노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역, 서울시, 한국사회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와 달리 거리홈리스를 서울역에 없어야 하는 사람 또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지금의 강제퇴거 조치는 오로지 서울역에서 거리홈리스를 배제하고 축출하려는 것일 뿐 탈노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하루 종일 서울역에서 생활하면서, 자고, TV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른 이들이 서울역을 약속장소로, 기차를 타기 위해,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처럼.

서울역 인근에서 하루 종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리홈리스의 주소지는 당연히 서울역이다.

'여기 서울역에 살고 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하라!

2012년 4월 25일

'거리홈리스 서울역 집단 전입신고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중구청에 의한 거리홈리스 물품 철거

2021년 10월, 서울 중구청은 서울역 일대 거리홈리스들의 노숙물품을 수거해 폐기하였다. 공공기관이 서울역 홈리스들의 노숙물품을 수거·폐기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20년 5월 서울역 광장 내 노숙물품 폐기처분 건을 시작으로 2021년 7월(서울역 3번출구)과 10월(서울역 우체국지하도 인근), 2022년 2월(서울역 광장) 등 코로나 시기에만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노숙물품을 쓸어가는 대규모 정비행정이 이뤄졌다. 법에서 정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기습적인 강제집행이었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홈리스들의 물품을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로 취급하며 폐기물로 처리한 것이다. 거리홈리스에게는 생필품인 노숙 물품을, 강제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도로정비 차

원에서 수거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관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민원을 이유로, 주거 공간이 없는 거리홈리스에게,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없는 거리홈리스에게, 가로환경을 이유로 노숙 물품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 진행한 중구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함께 말한 기자회견문을 공유한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대집행, 홈리스 노점상의 유일한 살림살이를 폐기물 처분한 중구청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과와 가로환경과, 청소행정과가 공조하여 서울역 우체국 옆 커피 노점상 홈리스의 물품을 쓰레기 처분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원을 이유로 한 어쩔 수 없는 집행이었다고 한다. 행정대집행은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후 진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당일의 집행은 집행 전날 단 한 차례의 계고 이후 진행되었다. 구청은 이전에도 계고했었다고 말하지만, 계고 이력을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집행은 대집행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대집행 절차를 규정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노점상 홈리스는 자신의 생계 수단이자 살림살이가 쓰레기 차 안에서 부서지는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다른 거리홈리스들 역시 쓰레기 차로 압수되는 그들의 유일한 소유물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구청에서 홈리스들의 물품을 쓰레기 처분하는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폭력이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들어 더 심해졌다. 필요한 물품을 분류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모든 살림살이가 쓰레기 차 안으로 집어 던져져 몽개진다. 반복되는 폭력에 대한 항의에 중구청은 물품 목록을 작성해 필요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시정 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구청은 홈리스 복지의 주거 중심으로의 전환과 질적 양적 확대 요구를 꺾음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홈리스를 감시하고 단속하고 쫓아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폭력을 진두지휘한 부서가 바로 홈리스 복지지원의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라는 점이다.

박스에 때가 묻고 옷가지가 해졌다고 해서 쓰레기가 아니다. 이는 홈리스의 살림살이자 전부다. 이것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로 보였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구청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다. 구청은 민원을 앞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기 전에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 홈리스 노점상의 생계 수단과 주거지를 철거하고 쓰레기 처분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인가? 중구청은 홈리스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법에 나와 있는 절차조차 무시한 채 강행한 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거리홈리스의 유일한 살림살이를 간단하게 폐기물 처리한 중구청

의 남루하고 저열한 인식이야말로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공공의 장소를 통솔하는 이들에 의한, 사적 공간을 단 한 뼘도 갖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배제를 즉각 멈춰라. 우리는 불법적인 노숙, 노점 물품을 철거하고 폐기한 서울 중구청의 행태를 규탄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속히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서울 중구청장은 지금 당장 면담 자리에 나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홈리스에 대한 인권 보장 강화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2021년 11월 9일

노숙, 노점 물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중구청 규탄
및 구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일부 발췌]

홈리스뉴스, “중구청의 불법적인 홈리스 물품 강제수거 및 폐기”, 2021.12.08

홈리스행동, <보도자료> 노숙, 노점 물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서울중구청 규탄 및 구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2021.11.09.

국가인권위원회, 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김윤영, “맞아 죽고 쫓겨나고… 서울역 떨꺼둥이의 반란”, 비마이너, 2020.05.26.

국가인권위원회, 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하라, 2012.04.25.

홈리스뉴스, “중구청의 불법적인 홈리스 물품 강제수거 및 폐기”, 2021.12.08

홈리스행동, <보도자료> 노숙, 노점 물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서울중구청 규탄 및 구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2021.11.09.

1. 도시에 대한 질문 : 어떤 도시, 누구의 권리인가?



2021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마을 노르델타에 대형 설치류인 ‘카피바라’가 출몰했다. 이에 대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은 “‘체 카피바라’가 노르델타를 점령했다”라며 카피바라를 남미의 혁명가 ‘체 게바라’에 비유하는 그림과 글을 SNS에 공유하고, 카피바라의 점령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본래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던 습지를 개간해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밀려난 카피바라가 먹이를 찾아 다시 원래 서식지로 돌아온 것으로, 동물들의 생태계를 침범한 인간들의 개발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카피바라의 점령에 열광(?)한 것은 이러한 생태 문제뿐 아니라 바로 도시의 불평등 문제 때문이다.

노르델타는 수영장이 딸린 집들이 즐비한 부유층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주변 기존 마을과 분리하기 위해 3m 높이의 콘크리트 담장을 쌓은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⁴⁾’로, 그들만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도시공간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지 분리 형태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대표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등장한 단지는 2002년 준공된 강남 도곡동 타워

4) 게이티드 커뮤니티란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어 출입이 제한된 주거단지”(Blakely and Snyder, 1999: 2)로, “주거단지 입구에 게이트와 이를 통제하는 게이트 컨트롤 시스템(단지출입시스템), 그리고 단지 주변을 두르는 담장에 의해 폐쇄적인 영역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김석경, 2007: 61)를 가리킨다.(정현목, 2012,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재인용)

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다. 입주민 외 출입이 통제되며 모든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아파트 내부에서 원 스톱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 한국의 가장 큰 비닐하우스 판자촌인 구룡마을 뒤로 보이는 타워팰리스의 대비적 모습은, 같은 도시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양극화와 주거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최근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분양 광고 카피로 논란이 된 반포의 주상복합 더 팰리스73(The PALACE73)를 비롯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프리미엄한 주거 공간’을 강조하며 주거지의 계층적 분리라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구룡마을과 타워팰리스처럼 하나의 장면에 담기는 곳은 아니지만, 동일 자치구내 대표적인 공간의 양극화가 드러나는 곳이 용산이다. 지난 1년(22.04~23.04)간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최고가 순위 상위 5위 중 4곳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데, 같은 용산구 동자동에는 1천 세대가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쪽방촌이 있다. 땅과 집, 공간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의 수호는 소수에 의한 더 많은 독점과 공간의 분리,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거와 도시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유엔 제3차 해비타트 회의(HABITAT III)에서는, 1,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거권’을 넘어,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개념에 기반을 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핵심 슬로건 삼아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다. 이는 인류가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물음이며, 동시에 도시의 이중성⁵⁾에서 도시의 가능성을 모색해 해법을 찾으려는 모색이기도 했다.⁶⁾

해비타트 III ‘정책페이퍼 1(Habitat III Policy Paper 1)’에서 ‘도시’가 ‘공공재’임을 명시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all) 거주자들이 삶의 질에 필수적인 공공재(common goods)인 도시라는 공간을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점유, 사용, 생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정의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1967년 발표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학자인 앙리 르페브르의 소책자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자본에 의해 지배된 도시에서 민중들은 분화되고 소외된 현실에 침잠되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상을 동시에 담아냈다. 가능성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외침은 파리와 프랑스 전역에서 전개된 68혁명의 주요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다. 1871년의 파리 코뮌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구현된 공간이었다. 2005년 세계 사회포럼에서 채택된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현장’에서도,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도시적 과정, 정당성, 투쟁들의 강화를 지향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도시에 대한 권리에 기반한 공공재로서의 도시는 ‘누구도 남겨두지(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 대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도시에서 물적, 법·제도적 기본 권리에 대한 긴박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 배제·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우선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2. 사회적 권리로서, 주거’권‘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adequate),

5) 도시, 소외의 공간이자 가능성의 공간. Henri Lefebvre, 1987, ‘도시에 대한 권리’

6)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각 국가와 도시 정부 간의 힘과 이익 논리에 의한 결정으로, 현재의 자본주의적 도시의 공간 구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제한’될 소지도 있다. 3차 회의의 핵심 의제로 설정한 ‘도시에 대한 권리’ 채택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었고, 이에 순화되어 ‘모두를 위한 도시’로 합의되었다. 이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진보적이고 변혁적 내용에 대한 공포에 기반한 거부일 것이다.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은 대부분 도시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비타트 III의 정책 보고서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도시 공간의 시장화(marketization)에 대응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서 '주거권'을 강조하고 있다.

1966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사회권 규약)>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주거권)'의 명확화와 함께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후 1990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결의안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4>에서는, 주거권의 구성요소를 7가지로 - 점유 안정성, 적절한 주거 기반시설 및 서비스, 거주 가능성(최저기준 확보), 비용의 적절성, 접근 가능성, 적절한 입지, 문화적 적절성 -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살만한 집'에,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느냐가 주거권의 핵심이며, 반대로 열악한 주거시설, 과도한 주거비, 짧은 거주기간은 주거권을 침해하는 비적정 주거이다.



2018년, 한국을 공식 방문해 주거권 실태를 조사한 라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 시민들이 집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권리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은, 부동산 경제정책의 일환이거나 복지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고 (보편성과 차별 없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여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도시 3대 민생 위협으로 이야기하는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한 권리 투쟁을 기억해 보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공성이나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투쟁의 역사적 기억들이 있는 것에 비해, 주거권을 위한 투쟁은 어떤가? 2010년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주거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확장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기억에 ‘주거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치는 집을 빼앗긴 철거민들의 구호를 넘어서, 보편적 권리로서 주거권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의 기억은 잘 없다. 그

만큼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은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사는(live) 곳'이, '사는(buy) 것'인 부동산으로 거래되면서, 주거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장에서의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이자 사적 생존 수단이 된 것이다. 상품화된 주택은 더는 청년세대나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는 재화가 되면서, 주거를 둘러싼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3. 개발과 세입자 주거불안의 역사

집이 부동산 상품으로서 강화된 데에는 주거정책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은 크게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주택공급을 늘려 집을 살 수(buy) 있게 해 집 없는 사람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live) 있게 하는 길이다. 전자(buy)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빠르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 시스템인 합동재개발, 재건축, 선분양제, 주택금융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후자(live)의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 주거비 지원제도 등이 있다.

한국은 철저히 전자인 공급중심의 정책(민간 개발의 건설공급정책)을 통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간 45~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오면서,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는 해소되었다. 모든 가구가 한 채씩 집을 갖고도 남는다는 통계가 발표된 지도 10년도 훨씬 넘었다.⁷⁾ 개발을 통한 화려한 도시로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풍요를 보여주는 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전되었다. 개발로 쫓겨나는 이들의 문제는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것이거나 국가 전체를 위해 양보해야 할 개인적인 피해쯤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부수고 짓기를 반복한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은 우리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았

7) 기존 주택보급률은 2002년부터 전국 100%를 넘었고, 1인 가구를 포함해 보완한 신(新)주택보급률로는 2008년부터 100%를 넘었다.

다. 도시의 발전과 주택공급,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의 온갖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지난 도시 개발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였고, 세입자 주거불안의 역사였다.

1960~7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판자촌의 형성과 이에 대한 불량주거지 철거,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 정책은 와우아파트 붕괴('70.04)와 광주 대단지 항쟁('71.08)으로 이어졌다.

당시, 영동지구(강남)개발과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250만 호 건설계획('72) 발표는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만 볼 수 없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공급 확대와 아파트값 고도 상승 속에서, 전세 제도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구매하는 사금융 제로로 활용되면 확대되었다.

1980년대 개발의 폭력은 집단 이주정착지로 조성된 달동네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극심해졌다. 당시 불량주거지 정비라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중동 건설에서 돌아온 유휴 건설 장비와 자본을 투자할 활로를 찾던 건설자본의 요구가 맞물리게 되면서, 민간주도의 새로운 개발 방식이 전개되었다. 1983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그것이다. 합동재개발은 토지와 주택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건설사와 함께 개발하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이윤추구 동기가 분명해진 개발 방식은 더욱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1886년 폭력조직이 설립한 입산개발 등 철거업무를 대행하는 철거용역 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70년대 판잣집을 단속하던 구청 '철거반'이 아닌 본격적인 '철거용역 깡패' 회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둔 철거의 폭력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86년 한 해 철거 현장에서 5명이 숨졌고, 86년에서 88년 2월 사이에 14명이 강제철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한다. "86, 88이 사람 죽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 시기 철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1987년 국제주거연맹(HIC)은 한국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철거하는 나라'라고 지목했다. 철거 폭력이 극심해질수록, 철거민들의 저항도 더욱 조직화 되었다. 1983년 목동철거민 투쟁을 원동력으로, 사당동, 상계동, 양평동 등지의 세입자들이 격렬히 투쟁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에 맞선 저항의 80년대 철거민 투쟁 과정에서 건물잔해에 깔리거나, 비관 자살, 용역 깡패의 폭행, 방화에 의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친 후야, 1990년을 전후로 영구임대주택 정책 도입 등 세입자용 임대주택 정책이 도입되었다.

한편, 3저(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호황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86·88 국제 스포츠 행사로 인한 철거로 당시 집값, 전셋값의 폭등이 심각했고, 1990년 봄, 세입자 일가족 17명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이어졌다.

1990년대는 의미 있는 철거민 투쟁의 승리들이 있기도 했지만, 철거 폭력 또한 더욱 악랄했다. 입산개발에서 나온 이들이 설립한 철거용역 깡패 업체인 적준개발(이후 다원건설)이 서울시 재개발 현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악랄한 폭력을 자행했다. 당시 인권·사회단체들이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폭력에 맞선 이 시기 철거민들의 투쟁도 망루 투쟁을 비롯한 더욱 목숨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자 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집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이 권장되었다. 국내 첫 장기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한 시기도 이때이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역시 전지구적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도시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도시 개발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채, 지구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로의 재구성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등 부동산의 금융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건설재벌에 금융세력까지 연결된 강력한 개발동맹체제로 구축되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뉴타운 광역개발과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고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에 신자유주의 도시의 욕망이 집결되었다. '타운돌이'⁸⁾라 지칭되던 정치적 욕망과 집값 상승이라는 개인들의 욕망이 결합하면서 개발의 욕망과 환상은 거품처럼 팽창해 갔다. 그리고 그 욕망의 정점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이 참혹한 용산참사를 필연처럼 맞이해야 했다. 이 시기 뉴타운 환상에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저항은 상가세입자들 투쟁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권이 발달한 서울 도심에 대규모 뉴타운 광역개발과 상업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상가세입자들의 생존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결국, 상가세입자였던 용산 철거민들이 살기 위해 망루에 올랐고, 죽어서 내려왔다.

2008년 말까지 지배했던 부동산 욕망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추축했다. 더이상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 동원에 기반을 둔 개발이 어려워진 부동산 장기 침체 국면에서 2012년 이후 도시재생으로 전환이 모색되었다. 즉, 더 이상 기존의 대규모 개발방식이 자본의 이윤을 무한정 보장해줄 수 없게 된 경제위기의 조건에서, 개발의 새로운 탈출구로 도시재생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도 현시기 다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치적 집권세력의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건설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확 바뀌야!” 한다는 기조로, 실패한 낙수효과에 기댄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기조는 주거·부동산 정책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정권 초기부터 발표된 민간주도 공급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은 ‘둔촌주공 살리기’ 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난 ‘1.3부동산대책(주택시장 연착륙 방안)⁹⁾’에서 정점을 찍어, 분양·재개발/재건축·금융·세제의 모든 부동산 규제정책을 폐기 또는 무력화시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선(善)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요인… 다주택자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서민정책”이라는 저급해 보이는 윤석열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정권의 부동산 투기와 개발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급락과 깡통전세, 건설사 부도 위기 상황은 심화하고 있다. 미국 연준에 종속된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으로 사상 첫 일곱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했지만,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200조 원(전세보증금 포함 3000조 추정)으로 GDP를 넘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¹⁰⁾ 문제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는 미국 금리 인상 소강 시, 다시 유동성(부채) 확장으로 인한 투기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자산 버블 확산 우려가 크다.

한편, 집값 폭등기에 재보궐선거로 등장한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신속통합기획 도입과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신규 정비구역을 빠른 속도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가 시공권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등 사업의 정체는 예상된다. 이는 과거와 같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지역이 황폐해진 채 방치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개발지역 철거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립에 내몰리는 한편, 일시적 반등기에 규제 완화 효과가 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폭력적으로 밀어 붙여질 강제철거의 위협도 상존한다.

앞서 짚었던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해줌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전

8)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분별한 뉴타운 공약으로 대거 당선된 의원들을 일컬어 '타운돌이'라 지칭되었다.
 9)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준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10) 2022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104.3%

락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주거불안의 심화였다. 연간 45~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 자가점유율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점유형태별 주거 현황을 보면,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1980년 58.6%에서 2020년 58.9%로 거의 변화가 없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다주택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독점만을 강화시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반면, 전세 비율이 높던 세입자 가구의 점유형태는 2010년에 전세와 월세가 비슷해진 이후, 월세의 비율이 증가했다.

공급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함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는 역사에서 자가 점유가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주거불안이 심화하였다. 대도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고, 점유의 안정성이 낮으며(임차 가구 평균 거주기간 3.2년), 고시원 등 비가시적 주거 빈곤 가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3. 부동산의 도시가 아닌, 주거권의 도시로

자가 소유를 향한 1가구 1주택 신화에 기반한, 주거 사다리(월세→ 전세 → 자가) 지원 정책은, 자가 소유를 정점으로 한 정책을 중심에 두면서, 자가 소유 가능 계층에 지원이 집중시켰다. ‘빛내서 집 사라’, ‘빛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정책이 그것인데, 이는 분양시장에 지속적인 수요의 유입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상승의 압력을 지속시켰다.

주거불안 심화의 지속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요구로 2020년 7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하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블랙마켓으로 방치된 임대차 거래에 대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가 30년 만에 일부 도입되었지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하는 해외사례와 달리 1회의 갱신권만 보장하고,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공정(표준)임대료제도¹¹⁾의 도입은 요원하다. 한국과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 세입자가 한 집에 거주하는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22.7%라는 것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입자 권리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베를린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주택 매각과 최근 10여 년 사이 세입자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려는 다국적 부동산임대기업들의 꿈수가 극성을 부려 임대료 폭등문제가 심각하지만, 베를린 세입자들은 부동산기업에 대한 몰수(수용) 청원운동을 성사시키고 사회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저항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한국 정부가 ‘착한 임대인’만 찾고 있을 때, 유럽 국가들에서는 임대료 미납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퇴거모라토리엄)나 임대료 동결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는데, 이러한 즉각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에는 사회운동을 통해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민간의 전·월세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이다. 역대 정부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거복지 정책으로 제시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 획기적으로 공급해야 할 집은, 사고파는 투기적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

11) 독일, 프랑스 등에 도입된 공정임대료 또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위치, 임대료, 경제적 여건, 지역 생계비 지표 등)를 토대로 공정(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세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정(표준)임대료는 임대료 관련 분쟁 발생 시에 법적 근거로 활용되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표준임대료 기준 등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표준)임대료 산정에는 세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주도를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부정적인 윤석열은 역설적이게도 민간 건설사 미분양이 심각해지자 국가 주도로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공공임대 예산삭감 대응에 무력했던 민주당도 미분양 매입을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이라고 목소리 높이기도 있다. 여야가 건설사 살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

또한, 공공택지의 매각 시도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14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에 대한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매각을 서두르는 대표적인 공공토지가 6조 3천억 원 대로 자체 평가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용산정비창 부지로, 전체 공공자산 매각 규모의 43%나 차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SH공사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에 분할 매각해 민간개발방식의 국제업무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토지 민간매각의 부동산 투기 개발을 촉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 땅을 자본에 빼앗기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의 도시가 아닌 주거권의 도시를 요구해야 한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만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세입자들의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의 보장이, 주거권의 도시를 위한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 연말 '내나라! 공공임대 농성단'의 농성 투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에 대한 대중적 동력을 강화해온 반빈곤·주거권 운동이, 주거권의 관점에서 "내나라, 공공임대!"를 더욱 선명히 요구해야 한다. 공공선매권 도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 등 도심 생활권 내 기존주택을 사회화하는 요구를 시작해야 한다. 기존주택을 사회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요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지하, 쪽방 등 주거 불평등이 재난 불평등으로 드러나는 현실에서 더욱 분명한 요구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14년 전 용산참사를 불렀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저항하는 '팔지마 공공의 땅'의 목소리를 통해, 투기적 소유로 귀결되는 그동안의 개발 방식을 끝내고 대안적 도시공간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의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집이 온전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권을 선을 실현할 때다. 우리 모두의 집 걱정과 불안을 개인의 임금소득 또는 대출상품으로 해결하거나, 열악한 주거로 인한 고통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각자의 문제로 치부하는 관성을 벗어 던지자! 집에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주거권을 선언하며 요구하자! "내나라, 공공임대! 팔지마, 공공의 땅!, 늘려라, 세입자 권리!"

참고 자료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는 ‘어메이징 코리아’ 기후악당에 맞선 철거민들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어메이징 코리아



상훈 : 저거는 얼마 전에 네가 안전 진단한 건물이지? 진짜 튼튼하게 지었나 보다.

동훈 : 안 튼튼해. D등급 나왔어

상훈 : ‘경축’이러는데?

동훈 : 재건축하려면 D등급 나와야 돼. D등급 나와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는 얘
기야. 돈 벌게 생겼다고….

상훈 : 하.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 난 걸 경축이라고….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인 구조기술사 동훈(이선균 씨)과 그의 형 상훈(박호산 씨)이 나눈 대사는 재건축과 관련한 ‘어메이징 코리아’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 자기 집이 위험하다는 것에 기뻐하며, 축하의 현수막이 나무끼는 개발 지역의 풍경은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한국의 주택은 일정 기간의 건축 연한이 지나면 재개발·재건축의 요건에 충족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30년, 벽돌구조는 20년 이상이면 노후도의 기준이 충족되어 ‘돈 벌게 생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경축’의 신호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100년 가는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선언했지만, 한국의 아파트 공동주택 교체 수명은 27년도 되지 않는다. 미국과 프랑스의 공동주택 교체 수명은 70~80년, 영국과 독일은 120년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는 개발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시 ‘돈’이다. 국내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못한 1.1%의 폐기물만으로도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의 58%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전형적인 토건국가인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없다.



월계동 재건축구역에는 2022년 7월 10일까지 자진이주하라는 공고와 철거 예정 건물에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있다. 사진 이원호

월계동,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이곳에도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가 났던 2006년부터 ‘돈 벌게 생겼다’는 ‘경축’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제는 ‘빨리 나가라’는 이주 개시 공고와 철거 예정이라는 경고문이 동네 담벼락과 대문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곳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거지인데도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는 명칭의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¹²⁾

한때 300여 세대가 거주하던 동네는 이제 다섯 세대만이 남아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가 자진 이주 기간이었지만, 조합은 자진 이주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해 진작부터 쫓아냈다.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동네였지만 이곳에 계획된 374호의 아파트 중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39호 밖에 짓지 않는다. 용적률을 올리는 변경계획이 인가되었지만 분양아파트만 당초보다 92호 늘었을 뿐,

12)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이 양호한지의 정도로 나뉜다.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재개발을, 양호한 곳은 재건축으로 추진된다. 이에 재개발은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진행하고, 재건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에서 추진된다. 2004년, 재건축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단독주택 재건축이 세입자 이주대책 등 공공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2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월계동처럼 2012년 이전에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구역이 지정된 곳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4호가 줄었다.

봉천동과 신림동 달동네를 거쳐, 월계동에만 20년 이상 살고있는 철거민 신 씨(65세, 여)는 이웃들이 다 쫓겨났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다고 했다.

“제가 2019년도에 여기서 통장도 하고 해서 잘 알아요. 여기가 세대 수만 300세대가 넘었어요. 대부분 세입자들이었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때는 47가구였어요. 저도 수급자이고요. 여기가 2006년 이전부터 개발을 추진하면서 집주인들이 집을 방치하고 그런 대신에 저렴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5년 넘게 멈춰있던 개발이 갑자기 추진되면서 이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난 거죠. 지금 다섯 가구만 남아 있는데, 네 가구가 수급자예요. 나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월계동 철거민 신 씨가 살고 있는 2층 집. 아들 두 명과 함께 살던 신 씨는 SH전세임대주택 제도로 지원받은 7천만 원에 자신의 돈을 조금 보태 9년째 전세로 이곳에 살고 있다. 사진 이원호

대책 없는 대책, 단독주택 재건축

월계동 재건축 지역은 지난 2018년 겨울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라는 유서와 함께 삶을 등진 아현동고(故) 박준경의 동네와 같은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다름없는 사업임에도,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법적 대책이 전혀 없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하나의 공법 체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사업인데도, 법은 재개발사업만 세입자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비슷한 동네에서 비슷한 개발을 하면서도, 개발사업의 명칭으로 세입자 대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나마 박준경의 죽음 이후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은 재개발사업 세입자와 동일한 대

13) 공공 인프라인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준용한다.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분류되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서울시는 첫 사례지역으로 월계동 재건축 지역에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씨에 의하면 이곳 세입자 중에 재개발에 준하는 알량한 보상이나 대책을 제공받은 세입자는 거의 없다.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은 정비구역지정 공람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계동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2006년 3월 이전부터 거주했어야 세입자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 세입자의 대책 기준일이 되는 사업시행인가도 구역지정 6개월만인 2006년 9월에 났으니, 월계동의 주거·상가 세입자들은 이곳에서 16년 이상을 살거나 영업했어야 재개발에 준하는 대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사실상 대책 없는 대책이다. 월계동에 20년 넘게 산 신 씨도 이곳 정비구역 내의 주택에서 10년밖에 살지 않았으니, 대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점포정리 20% 행사. 긴 세월 고맷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12년간 이곳에서 장사했지만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이라 상가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대책으로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유도하고 있던 하나 이를 기준으로 해도 2006년부터 영업한 사람에게만 해당하여 이 가게 주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 이원호

“여기는 개발을 한다면 원래 재개발을 해야 하는 곳인데, 재건축으로 바뀐 거예요. 아현동 사건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도 세입자 대책을 세운다고 했고, 우리 동네가 첫 대상 지역이라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사 갈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사비 몇 푼도 없이 그냥 다 쫓겨났어요. 여기가 2006년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았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세입자가...”

월계동 신 씨가 세 들어 살고있는 주택의 반지하에도 50대 후반의 남성 세입자 ㄱ 씨가 살고 있었다. 떠나지 못했던 그는 결국 반지하 방에서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떠날 수 없었던 이곳을, 그렇게 떠나버렸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혼자였던 분인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매우 괴로웠어요. 마음 의지할 곳도 없고, 자기 몸도 아픈데 갈 곳은 없으니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통장도 하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했어요.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좀 돌봐줘야 한다고…. 그런데 개발지역이라 그런지 별다른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인가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서 제가 고구마를 썰서 내려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벽에 기대서 누워있는데 싸하더라고요. 방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떠난 거예요.”



사람이 떠난 빈집들이 많지만 마당에는 빈집마다 감나무에 감이 열려있다. 이처럼 대부분 멀쩡하고 예쁜 집들이었다. 사진 이원호

고쳐 쓸 필요도, 튼튼하게 지을 필요도 없는 집

대부분이 쫓겨나듯 떠나 경고장이 붙어 있는 동네는 스산하면서도 한편으로 반듯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16년 전,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의 낡고 열악한 주거지’라고 결정했을 그 판단을 지금 시점의 동네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동네라, 집만 잘 수리하면서 고쳐 써도 충분할 텐데…. 아뵘새! 그러면 돈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물건이 낡아서 새롭게 고치거나 바꾸려면 돈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어메이징 코리아’에서 집은, 자기 돈을 들여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바보다. 더 방치해서 시간이 지나면 개발을 해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튼튼하게 오래 가도록 건설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2~30년 후 개발할 테니 말이다. 신 씨는 집이 조금 낡았지만 살기 좋았던 동네였는데 삭막해졌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저희 아버지가 건축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시멘트랑 모래 배합 비율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100년이 갈 집도, 일부러 20~30년만 가게 지어요. 그래야 그때 또 부수고 개발하고 하니까요.”

“집이 옛날 집이라 가끔 비가 새기는 했어요. 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해도 방수 페인트 한

번 옥상에 칠하고는 그만이에요. 개발될 동네라고 잘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저는 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래 살았고,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면야 좋지요. 그런데 지금의 개발은 저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살기 좋아요. 시장도 가깝고, 전철도 가깝고, 사람들도 오래 살아서 친하고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에요. 그런데 개발되면서 이렇게 삭막해졌죠.”



우이천변을 따라 다세대 빌라들이 있고, 안쪽으로는 단독주택들이 있는 월계동 재건축구역 모습. 사진 이원호

기후위기와 재난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서울시 도시계획

월계동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는 ‘우이천변에 있어 침수 위험지역’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이천 바닥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하천을 생태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더 우선한 침수 대책일 것이다. 지난 8월 초, 기후재난이 불평등을 따라 아래로 흘러 반지하 가구를 덮친 비극을 우리는 아프게 목격했다. 온갖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딱딱하게 덮인 땅에 빗물이 스며들 수 없었다. 하천의 범람이 아니라 땅에 스미지 못해 하수관으로 몰린 빗물이 역류해 땅속 삶을 덮쳤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물리적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개발사업 일변도이다. 급기야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지역이 빠른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는 반지하 주민들이 당했는데, 지원은 개발을 원하는 투기적 소유주들에게 하겠다는 것이다. 많이 알려졌듯 콘크리트 건축산업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주범¹⁴⁾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불평등 참사를 잊은 듯,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고층 빌딩을 세우고 콘크리트로 뒤덮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14) 건축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콘크리트는 단일 품목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를 차지한다. 송률·크리스티안 슈바이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 기후 위기, 건축, 윤리’, 월간 SPACE 648호, 2021년 11월



월계동 철거민 신 씨는 다가올 명도 집행을 대비해, 방 한쪽에 침낭과 텐트를 준비해 두고 있다. 사진 이원호

철거민 투쟁, 토건·기후 악당에 맞선 싸움

월계동 철거민 신 씨는 재난 위험과 안전하지 않은 노후주택이라는, 토건 세력들의 겁박에 의해 쫓겨나는 중이다. 그녀는 자진 이주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날아온 명도소송 패소 판결문에 따라, 겨울 전 치러질 전쟁 같은 명도 집행을 대비하고 있다. 방 한쪽에는 자녀들과 캠핑할 때 쓰던 침낭과 텐트도 챙겨두었다. 이 집이 집행당해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 구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싸우겠다고 한다.

개발에 맞선 철거민들의 싸움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토건·기후 악당에 맞서는 싸움이기도 하다. 불평등의 재난을 온몸으로 맞서는 철거민들의 싸움에 승리를 기원한다.

*해당 글은 [비마이너 기획연재 : 불평등한 기후재난의 시대, 싸우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기후위기와 재난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시 계획, 쫓겨나는 철거민] 원고입니다.

재난 증폭하는 쪽방, 주민들의 안부를 묻다

이동현 / 홈리스행동

남대문 쪽방에 사는 고아무개 님은 코로나19 기간 내내 스스로를 잠갔다. 온갖 만성질환에 시달리던 차 코로나19에라도 걸리면 끝장이다 싶었기 때문이다. 바깥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게 백신보다 안전할 것 같았다. 늦은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는 쪽방 밖에 나오지 않았다. 쪽방 문고리에는 “코로나19, 모든 사람 방문 사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을 걸어 두었다.

다행히 그는 백신을 맞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 대신, 욕창을 얻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과 그의 몸을 한데 두기에 한 평 남짓한 쪽방은 너무 좁았다.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그의 등과 엉덩이는 썩어 갔다. 결국 지난여름,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다섯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의 선택을 두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라며 나무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쪽방이라는 재난적 주거환경이 코로나19 위기를 증폭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만이 아니다. 기후위기 역시 쪽방에 인입된 이후로는 거세게 증폭됐다. 동자동과 남대문로5가동(양동재개발지구) 쪽방 주민이자 주민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네 분을 만나 기후위기에 관해 물었다.



지난 4월, 남대문 쪽방에 사는 고아무개 님의 쪽방 문고리에 “코로나19, 모든 사람 방문 사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사진 이동현

삶이 재난이니까

기후위기와 쪽방을 연결한 글을 쓴다는 게 가능할 듯하면서도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쪽방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막막했다. “기후위기와 쪽방으로 글을 쓰라는데 뭘 물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침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동자동 쪽방에 사는 윤영주님은 바로 이렇게 답했다. “삶 자체가 재난이니까. 우리 삶 자체가 재난이니까.” 이렇게 운을 댄 후 그는 기후위기가 증폭한 고단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정화조가 원래는 이렇게 통으로 해서 문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 만들었던 곳이라 벽돌로 쌓아서 만든 거예요. 하수구도 옛날 토관(흙을 구워 만든 둥글고 큰 관)이에요. 그러니 비가 와서 그게 넘치니까 지하 1층 벽체를 타고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 방마다 똥물이 스며드니까 그게 냄새가...”

더위와 폭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임박한 겨울에 만날 재난도 선했다. 대부분 겨울철 쪽방은 낮보다 저렴한 심야시간대의 전력을 이용해 전기패널(바닥에 깐 열선)로 난방을 한다. 그러다 보니 전기가 들어오는 밤 10시부터 아침 5시 30분을 빼고는 냉골이다. 보일러 있는 집도 드물다 보니 겨울 초입이면 주민들은 커피포트를 구하러 다니기 바쁘다. 더운물을 쓰기 위해서다. 여름에는 더위 죽고, 겨울에는 추위 죽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사진 왼쪽) 동자동 윤영주님이 이야기한, 전에 살았던 지하층 쪽방 내부. 습기로 쪽방 복도의 벽지와 페인트가 떨어져 나갔다. 사진 이동현 (사진 오른쪽) 동자동 윤영주님이 이야기한, 전에 살았던 지하층 쪽방 내부. 빗물을 머금은 벽체는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에도 물을 떨군다. 사진 이동현

우울과 외로움

기후위기라는 말에 우울, 외로움이 따라붙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 주민모임의 부위원장을 맡아 늘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백광현 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비가 오면 나갈 데가 없잖아요. 방이 조그마하고 하나니까, 굳이 이 방에만 있어야 한단 말이야. 가만히 방에만 있다가 우산 갖고 나와도 특별히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방에 있는 거예요. 이번 장마철에도 그렇게 며칠 동안 방에만 있었잖아요. 무슨 어떤 교류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언제든지 좀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날이 좋아야 이렇게 나와 있다가 사람들 만나면 인사나 하지. 나도 옛날에 처음 여기(동자동) 왔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혼자 중얼중얼거릴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 보면은 웃는 사람이 없어요. 공원에 가 봐도 다 풀 죽어 있고. 그런데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요. 원래 저는 웃음이 많았어요. 웃음 많다고 실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혼자 좁고 어두운 방에 누우면 이 것저것 안 좋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백광현, 동자동 쪽방 주민)

“폭우가 내리면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방 안에만 있어야 해요. 대부분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은 평수가 작잖아요. 작은 평수에서 환기도 안 되고 통풍도 잘 안되는 그런 곳에 있는 게 뭐랄까, 소외감 같은 거, 그런 것도 더 느끼게 되고.” (윤용주, 동자동 쪽방 주민)

겨우 비 때문에 마음들이 아플 수 있다는 건 몰랐다. 내리는 비에 한때 상념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평 쪽방에 갇히기에 생기는 우울이라니. 공원에서 만난 이들을 불러들여 어울릴 거실이 있는 집이 있다면, 똑바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것 말고 창밖 세상을 보고, 화분이라도 매만질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다면 깃들 리 없는 우울 아닌가.



(왼쪽) 창신동 쪽방의 모습. 어깨를 비틀어야 올라갈 수 있는 좁고 가파른 계단이 있다. 복도는 좁은데다 아래층 계단 사이엔 난간도 없어 추락 우려가 크다. (오른쪽) 지난 겨울 빙판이 된 세면장에서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진 남대문로5가 쪽방 주민 박아무개 님의 뒷모습. 사진 이동현

안전을 위협하는 집

유엔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는 거주자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것을 주거권 구성 요소의 하나로 열거한다. 그러나 우리는 침, 재충전을 가능케 하리라 믿었던 집들이 흉기로 돌변하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겪고 있다.

“지금 이 방은 괜찮은데, 요 밑 9-19번지 지하에 살 때 습기가 차서 천정이 주저앉으니까 내가 천정을 이만큼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싱크대 쪼가리 같은 걸로 얹어준 거예요. 근데 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그러면 김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게 항상 축축한 게 나중에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아 버린 거지. 누워 있는데 주저앉아서 머리 이마밖도 까지고.” (윤용주, 동자동 쪽방 주민)

“쪽방촌 주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또 강풍 불 때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아예 외출을 안 해요. 겁도 나고 머리에 뭐 맞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쓰레기고 뭐고 적재된 게 많으니까 그런 게 막 날아다녀요. 강풍 부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장마 때 태풍 이럴 때가 겁나니까 외출을 못 하죠.” (박종만, 남대문 쪽방 주민)

“내가 옛날에 24번지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방 안에서 밥해 먹다 이불이 한 이만큼 불에 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복도에다 가스레인지 놓고 끓여 먹지. (...) 여기는 너무 취약해 가지고 병 안 걸릴 사람도 병에 더 걸려. 그냥 요만한 방에서 짐 놓고 거기서 새우잠 자고 쭉그리고 자고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길순자(가명), 남대문 쪽방 주민)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동자동,양동 쪽방 주민들. 사진 정성철

흠어놓지 말고, 여기에, 집다운 집

쪽방 주민들은 폭염, 폭우, 태풍, 혹한, 그리고 고립과 우울 같은 기후위기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답을 주거환경의 개선에서 찾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쪽방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겠다는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절차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열악한 쪽방 건물들은 더욱더 낡아져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 민간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남대문로5가동(양동 재개발지역)은 주민들의 대응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수립됐지만, 호당 면적이 14㎡(약 4평, 최저주거기준 상 최소 면적 기준)에 불과해 ‘도로 쪽방’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남대문로5가동 쪽방 주민들은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을 보장할 것을,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선언만 있을 뿐 한 걸음도 못 떴는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근본적 해결 방법은 새로운 주택을 짓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바뀌려면 결국은 공공개발만이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윤용주, 동자동 쪽방 주민)

“계속 이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동네를 못 떠나는 거야. 왜? 환영을 못 받으니까, 판 데 가면. 그나마 여기는 공동체 아니야. 비슷한 사람 있으니까. 그래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한 대로 추진하라는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특별하게 엄청나게 저기는(능력은) 없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모임(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에 대해 동기 부여를 분명히 해주고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고 하며 (우리 주거권을) 어느 정도는 다 지켜주고 싶어요.” (백광현, 동자동 쪽방 주민)

“언론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님은 공공임대주택 1인 최소 면적을 40㎡(약 12평)로 한다 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1㎡(약 6평)가 최소 기준이라고 했는데 왜 양동 쪽방만 14㎡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죠?” (박종만, 남대문 쪽방 주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좀 크게 임대주택을 지어주십사 하는 거. 왜냐면은요,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혼자 고독사하는데 그래도 서너 명 모여 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4㎡는 너무 적다 이거죠.” (길순자(가명), 남대문 쪽방 주민)

열악한 주거가 기후위기를 증폭하고 있기에 주거 질의 획기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몇 집 걸러 한 집에 설치하는 에어컨, 하루 한 끼 주는 식권과 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미봉책도 될 수 없다. 여전히 쪽방 주민들은 증폭되고 중첩된 재난 속 삶에서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의 주거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기점 삼아 이들의 싸움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요청한다.

*해당 글은 [비마이너 기획연재 : 불평등한 기후재난의 시대, 싸우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삶이 재난’인 동자동, 양동 쪽방 주민들] 원고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홈리스 혐오와 ‘조던 닐리’의 싸움

미국 뉴욕 지하철서 살해당한 홈리스…노숙 범죄화 정책이 야기한 증오범죄

디디 / 인문지리·도시연구자



〈사진=Eyewitness News 영상 캡처〉

조던 닐리는 뉴욕에 살던 30살의 흑인이며 지하철 퍼포먼서이자 댄서이다. 그는 2023년 5월 1일 지하철을 탔다. 갑자기 재킷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며 절망적이라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 혹은 살해당한다.

다니엘 페니는 해병대의 베테랑이며 세계여행을 즐기는 24세의 가장이다. 아프리카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뉴욕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는 홈리스를 마주친 그는 그 자리의 질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홈리스의 목을 졸랐다. 다른 두 명의 승객이 페니를 도왔다. 다니엘 페니의 변호사는 페니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말한다. 목을 졸랐지만,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불의의 비극이었을 뿐이다. 검사관은 닐리의 사망을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지만, 페니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페니가 닐리의 목을 조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몇몇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사회적 시스템이 정신질환에 고통받는 홈리스에 대한 돌봄에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미국 사회에 끈질긴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강조되었다. 하지만, 솔직히 더 많은 사람을 사로잡은 것은 지하철에서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황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이들에게 닐리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닐리, 혹은 닐리 같은 사람이 지하철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닐리를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아니라 불길한 것, 자신을 위협하는 것, 불안의 요소로 인지할 때, 페니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된다. 보수 정치인들은 페니의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 칭송하며 사면을 요구했다. 페니의 보석금 마련을 위한 돈을 기부하는 대선 후보들이 줄지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페니, 그리고 전

철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말한다.

페니의 행동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면, 닐리가 저지른 범죄는 무엇인가? 페니의 변호인단은 닐리가 홈리스이며 정신질환자이자 40건의 체포기록이 있다며 “조던 닐리가 그 열차에 가한 위협, 협박, 공포는 이미 잘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변호인단의 주장은 궤변이다. 닐리의 목을 졸라서라도 지하철의 질서를 수호하기로 한 페니와 시민들이 닐리의 의료기록이나 체포기록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닐리는 소리를 지르고 옷을 집어 던졌지만, 타인을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음식, 물, 쉼터가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한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도움이 아닌, 신체적인 제압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그가 흑인이며, 정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자, 사회에서 뿌리 뽑힌 홈리스였기 때문이다. 닐리를 죽인 페니는 사건 후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인종주의자가 아니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언제라도 “위협과 위험이 있다면”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니에게 홈리스는 사람이 아닌, 잠재적 위협일 뿐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활동가들과 시민단체가 강조하듯이 이 사건은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다. 페니의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조던 닐리는 이전에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였다. 그의 어머니는 닐리가 14살 때 살해당했다. 닐리는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자폐증과 조현병을 앓았다. 여러 가정을 전전하다가 위탁 보호시설에 입소한다.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대부분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많은 경우 지속적인 학대에 놓인다. 닐리 또한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21살에 위탁가정에서 자동 퇴소했고, 홈리스가 되었다. 이후 지하철에서 살해되는 순간까지 정신장애, 체포, 입원이 돌고 도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닐리는 심지어 뉴욕시에서 가장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홈리스 명단인 “상위 50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디언의 기사가 지적하듯이 안정적인 주거 없이 일관된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뉴욕시가 제공하는 쉼터는 위험하고 부자유스러우며 권위적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만성적인 비판에 시달려 왔다. 한편, 닐리가 살해되기 6개월 전인 2022년 11월, 뉴욕 시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홈리스에 대한 강제 입원 명령을 선포한다. 물론, 강제 치료가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라는 단어가 가감 없이 드러내듯이 이러한 조치는 닐리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장기적 치료와 돌봄에 연결하는 대신 홈리스를 위험 요소로 파악하고 대상화하며 탄압하는 행위이다. 노숙을 범죄화하는 국가의 정책은 홈리스를 무능력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혐오하고 범죄화하는 시선을 강화하며 홈리스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를 부추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닐리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 채 오랜 시간 극단적인 물질적, 정신적 불안정성을 홀로 감당해 와야 했던 그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다. 그렇게 사회가 자신에게 강요해 온 상황의 극단적인 폭력의 문제를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시스템의 붕괴를 운명으로 알렸다. 그것은 닐리로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힘을 다해 돌파하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이었고, 사회 전체를 향한 강렬한 정동적 발언이었던 셈이다.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은 닐리와 같은 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는 대신 닐리를 제거하는 편한 방법을 택했지만,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은 과연 누구인가.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날리인가. 사회인가.

날리에게는 그를 내성적인 청년, “모두가 좋아하는” 재능있는 댄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날리가 죽기 전, 한동안 보이지 않는 그를 걱정하던 팬들은 그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사랑하던 댄서 날리가 홈리스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민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었다. 날리의 명복을 빈다.

*해당 글은 〈홈리스뉴스 113호〉 ‘세계의 홈리스’ 코너에 실린 원고입니다.

우산 여러 개를 펼쳐야만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을 아시나요

이재임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짐승들은 자기가 자는 곳을 안 가르쳐 준대요.
그게 자기한테 불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여자가 어디서 잔다고 얘기가 돌면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 2022, <여성 홈리스 증언대회> 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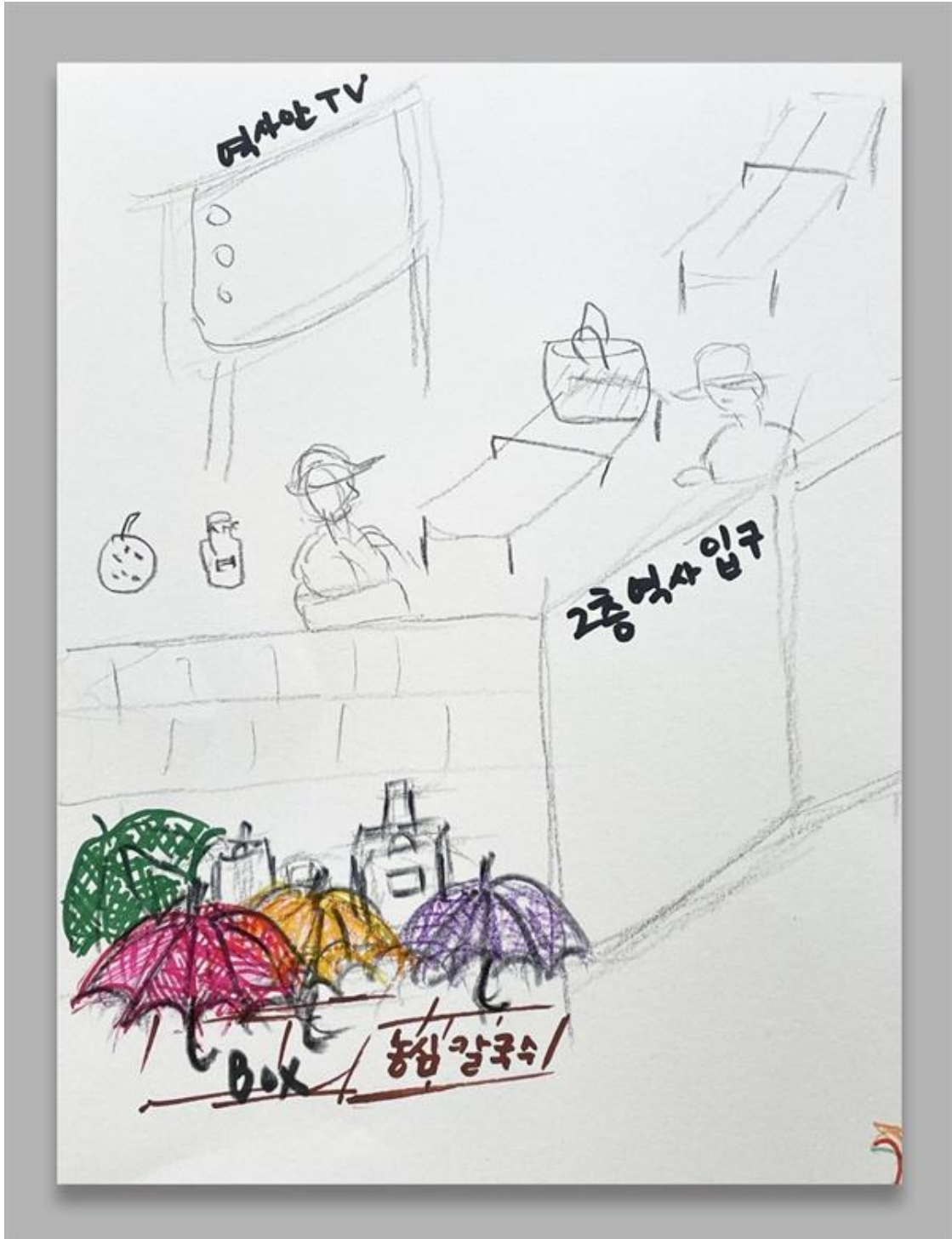
한 여성 홈리스에게 잠자리를 어떻게 해결하나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녀는 거리 생활을 정글의 삶에 비유했다. 눈에 안 띄게, 안 보이게, 없는 듯 지내기가 그 나름의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가능하듯 거리는 여성에게 더 험난하다.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거리, 시설, 쪽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여성 홈리스의 주요 거처는 이들 장소와는 사뭇 다르다. '거리 노숙' 상태의 여성 홈리스라 하더라도 찜질방,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에 주로 머문다(2010, 이성은·고은정,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성별영향 평가).

고정적인 잠자리 대신 잦은 이동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이 거리에 머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실태조사 범위는 여성 홈리스의 동선을 포괄하지 못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홈리스는 1만4404명, 그중 여성은 23.2%인 2244명이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홈리스의 존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소극적 실태 파악이 여성 홈리스의 존재를 가리는 것이다.

미흡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 탓에 여성 홈리스가 갈 곳은 점점 사라진다. 배제의 악순환이다. 1~2개월 일시적인 잠자리를 제공하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의 경우 남성이 이용 가능한 곳은 서울역·영등포역 같은 홈리스 지원체계 밀집 지역에 6개소가 있지만, 여성이 이용 가능한 곳은 1개소뿐이다. 그마저도 홈리스 밀집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다.

뻘한 위험 앞에 안전을 지키는 것은 여성 홈리스 각자의 몫이 됐다. 어두운 밤에는 잠들지 않으려 계속 걷는다. 대신 날이 밝으면 화장실에 기대어 앉아 쪽잠을 청한다. 때로는 상가 건물에서 무상의 노동을 제공하고 잠잘 곳을 확보한다. 남자처럼 머리를 자르고, 우산 여러 개를 펼쳐 잠든 모습을 숨긴다. 모두 현행 홈리스 지원체계가 보려하지 않는 여성 홈리스의 모습이다.



〈여성 홈리스가 나눈 집 이야기〉 전시 중, 로즈마리의 작품(부분)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여성 홈리스 심리지도 중 일부.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홈리스들과 홈리스의 높은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의자 디자인이 그림으로 표현됐다. 역사 외벽을 따라 우산으로 가린 박스집이 보인다. 사진 홈리스행동

홈리스 지원체계 속에서 미끄러지는 여성 홈리스

거리 홈리스와 집 구하기 여정에 함께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가장 만만하고 든든하게 활용한 건 임시주거지원 제도였다. 거리홈리스와 노숙위기 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단기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느 날은 관계를 쌓아오던 20대 여성 홈리스와 함께 임시주거지원을 위해 담당기관으로 향했다. 센터로 가는 길 위에서 어떤 기준을 우선해 방을 고를지 수다를 나눴다. 잠금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유사시 퇴로는 확보돼 있는지,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지, 창문으로 방 내부가 노출되진 않는지, 근처의 무료급식소는 밥맛이 좋을지 등등...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스텝으로 함께 수급신청도 해보자고 했다. 임시주거지원은 타 복지제도로 나아가는 발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뿔싸, 첫 발판부터 우지끈 부서졌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직원 A : 이분은 젊고, 여자고, 지적장애 있으시고, 알코올 문제 있으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있어요. 일례로 저희가 방을 안내해드리고 사례관리를 하려던 도중에 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나요. 남자들한테 당한다든가.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성을.

활동가 B : 여성들은 다 쉼터나 공동생활시설로 안내하나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직원 A : 무조건은 아닌데, 이런 케이스는 지금 임시주거지원 대상자도 아니에요. (...) 임시주거지원 보면 제일 크게 뭐가 돼 있어요. 자립, 자활이 혼자 가능해야 해요. 그리고 공적서비스 연결을 해서 혼자서 생활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 홈리스행동 활동 기록, 2020년 2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임시주거지원 상담 과정 녹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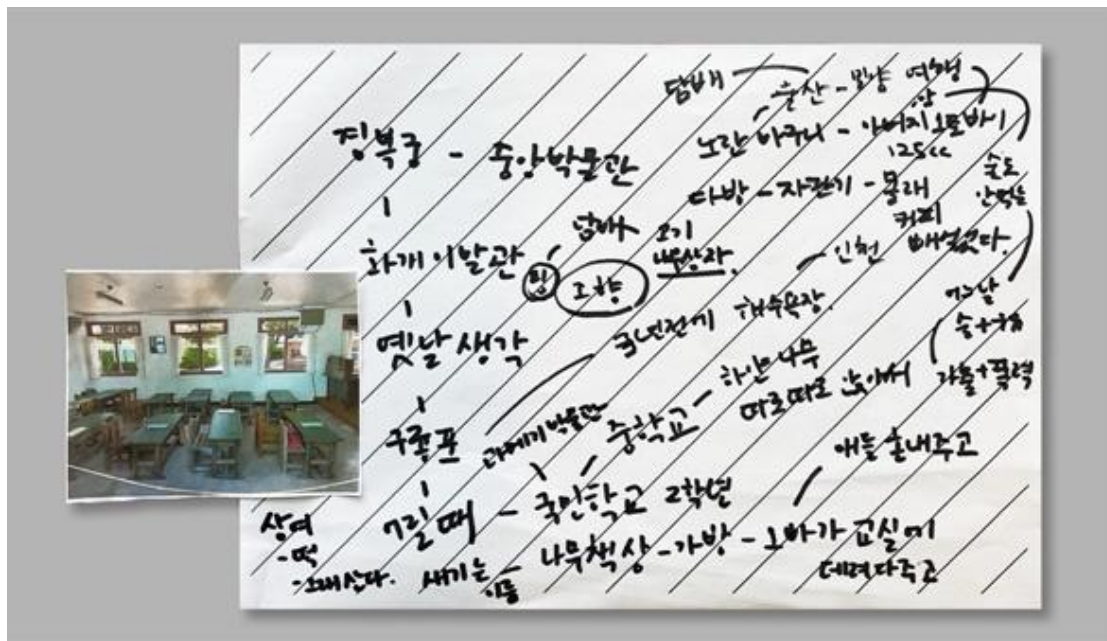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나와 동행한 여성 홈리스는 임시주거지원 신청을 거절당했다. 이상했다. 임시주거지원을 위한 상담 점수표에는 여성인 경우, 고시원 등 거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점을 둔다. 오히려 남성에 비해 더 빠르게, 긴급한 이유로 임시주거지원이 돼야 마땅하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분은 임시주거지원 대상자도 아니다'라는 직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절은 반복됐다.

이유는 '안전'이었다. 담당 직원의 주장은 이랬다. '임시주거지원의 거처로 활용되는 건물은 민간의 쪽방과 고시원이 대부분이다. 이곳 주민은 남성 다수로 구성돼 있다. 화장실과 욕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건물 구조 특성상 젊은 여성이 지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른 대안을 묻자 장애인 시설이나 여성 쉼터 등 홈리스 지원체계가 아닌 타 지원체계의 시설입소를 권유했다.

나와 동행한 여성은 과거 원치 않은 시설 경험 탓에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것은 애초 계획으로

고려하지 않던 터였다. 재차 반문하자, 담당 직원은 테스트를 제안했다. 임시주거지원에 앞서 응급 거처를 제공해 줄 테니, 매일 약속한 시간에 담당 직원과 만나 신뢰를 주면 임시주거지원을 신청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그의 제안은 임시-임시주거지원인 셈이다.

잠시 혼란해진 머리를 정리하고 나니 물음표가 떠올랐다. 왜 이런저런 취약함을 이유로 검증을 요구받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홈리스 당사자가 아니라 지원체계가 미리 헤아릴 일 아닌가. 아무래도 부당했지만 직원은 자의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성 홈리스가 나는 집 이야기〉전시 중, 난초의 작품 삶에서 주요하게 머물렀던 공간을 떠올리며 인생 이야기를 되짚어보았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남성 다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간에 대한 위협과 불편은 여성 홈리스 당사자 스스로도 익히 잘 아는 종류의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성 전용 고시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하나의 고시원을 찾아 한 여성 홈리스의 입실을 조력했다. 계약금도 보냈다. 이번에는 홈리스 지원체계가 아닌, 단체(홈리스행동)의 자체 비용으로 월세를 지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자명의 '홈리스'라는 단어가 깜짝 놀란 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계약을 취소하자는 것이었다. 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보호자가 있다면 입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단 말도 뒤따랐다. 홈리스 상태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해도 민간의 영업장에 별달리 효과는 없는 항의였다. 이렇듯 여성 홈리스는 홈리스를 위한 공간에서도, 여성을 위한 공간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곤 한다. 이종의 구별 짓기 속에 놓인 셈이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 홈리스는 시설로 연계하는 공식이 노숙인 지원체계 현장에는 통용되고 있다. 알코올·약물중독·우울증 등 정신질환 유병률의 경우, 여성 홈리스는 42.1%로 남성(15.8%)보다 많다(2021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여성 홈리스의 정신질환은 거리로 내몰린 원인이자 고된 거리

생활의 결과이기도 하다. 남성과 같은 노숙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또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독립 주거가 아닌 타 지원체계 속 시설로의 연계가 더 잘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거주자는 매우 장기간 거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이의 비율은 43.2%로, 이는 남성 노숙인 생활시설(18.9%)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21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노숙인 지원 기관을 가면 시설 입소부터 들이미니 참 속이 시끄럽다. 아예 지원기관 방문을 삼가기도 한다. 많은 여성 홈리스가 노숙인 지원체계 속에서 미끄러진다. 각자, 흩어져, 나름대로 살아남고 있다.

여성 홈리스가 나눈 집 이야기

“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먼저 둘러봐요.
여기 여자가 나 혼자인가, 둘러봐요.
누가 옆에 있으면 좋으니까.

- 2022, <여성 홈리스 증언대회> 인터뷰 중

'2022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는 예년에 없던 팀이 하나 생겼다. 여성팀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조건으로 인해 여성 홈리스는 모임 공간을 갖지 못했다. 문제의식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여성 홈리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술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여성 홈리스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여성 홈리스 6인이 모여 그리고 쓴 '집'에 대한 전시를 기획 중이다. 여성 홈리스를 가리는 장막을 여성 홈리스 스스로 걷어내 보려 한다.

그간 IMF 남성 실직 가장의 문제로만 이해되고 짜여온 홈리스 정책의 틀거리를 여성 홈리스의 시선으로 다시 훑아보고자 한다.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등 남성 홈리스의 경로와는 달랐던 삶의 경험, 비정규·저임금 노동을 하필이면 너무나 열심히 해왔기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던 역사들을 나눴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여성 홈리스들의 만남을 바탕으로 주거·노동·의료·급식 등 홈리스 지원체계 전반이 젠더 관점을 반영해 새롭게 짜이길 기대한다. 겉눈질로만 지나치던 여성-홈리스가 이제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다.

죽암동 종림에서 침파동으로
 이사간 이웃은 2층에 사는 아저
 씨에 두서름에 아들이 집에
 질린것 같아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죽암동
 종림에서
 살았습니다.

〈여성 홀리스가 나는 집 이야기〉 전시 중, 사계절의 작품(부분) 살아온 집에 대한 심리지도 중 일부. 이웃과의 갈등으로 떠난 집에 대한 묘사가 담겼다. 사계절은 자녀를 양육하기 적절한 환경을 찾아 이사를 했다.

*해당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간담회 가이드

빈환 기간 중 진행되는 간담회, 인터뷰는 부동산 정책, 빈민에 대한 정책, 실업대책 등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떤 저항을 하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빈곤은 어떤 사회,경제, 제도적 배경 속에 생겨나는지, 빈민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며, 어떤 계기를 거치며 투쟁하기로 마음 먹게 되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합시다. 빈곤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담회와 인터뷰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빈곤의 실상을 알려내는 계기로 삼읍시다.

철거민과 함께 하는 도란도란 인생 이야기

*철거민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다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못 들었던 이야기는 체크해 질문합니다

*꼭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과거>미래 일수도 있고 미래>현재>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친근하고 평등한 대화를 나눕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요!

과거	<p>*철거(예정)된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p> <p>*그 장소에서는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하셨나요.</p> <p>*현재 철거(예정)된 마을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p> <p>*철거(예정) 전 마을 분위기는 어땠나요.</p> <p>*개발이 된다는 소식은 언제/어떻게 접했나요.</p> <p>*개발에 대한 보상/이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p> <p>*(철거가 됐다면) 강제철거가 이뤄진 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p>
현재	<p>*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는지)</p> <p>*현재 나의(우리 마을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p> <p>*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주 및 보상절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그 보상과 절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p> <p>*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p> <p>*철거 투쟁을 하며 가장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p> <p>*(철거가 됐다면) 강제철거 전과 후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가족, 마을에 있어)</p> <p>*억울하게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은 매우 많지만, 모두가 철거투쟁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쟁을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p> <p>*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오랜 시간 포기않고 철거투쟁을 이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p> <p>*철거민들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p> <p>*철거민과 학생(혹은 질문자의 신분)이라는 두 사람은 얼핏 공통점도 찾기 어렵고 거리도 멀어보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대를 해야하는 이유, 연대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p>
미래	<p>*투쟁에 승리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요.</p> <p>*강제철거 없는 세상, 철거민이 없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p> <p>*빈환 참가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p>

쪽방 주민과 함께 하는 복작복작 동네 이야기

<p>쪽방촌 생활</p>	<p>*동자동에는 언제/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이전에는 어떤 곳에 사셨나요. *쪽방 건물은 주방과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사용하시는데 있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사는 주로 어디서/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여름과 겨울철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극단적인 날씨가 지속되고, 에너지요금도 인상되는데 냉/난방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쪽방 주민은 중장년층 이상이라고 알고있어요. 병원 이용할 일이 많으실텐데 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p>
<p>차별과 편견</p>	<p>*쪽방촌은 각종 봉사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일정으로 쪽방촌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가곤 하는데요. 이러한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불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민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쪽방촌과 쪽방 주민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인데, 가난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낙인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p>
<p>제도적 지원</p>	<p>*서울시의 쪽방촌에는 쪽방 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쪽방상담소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시나요?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개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의 식권을 나눠주는 동행식당 사업이 실제 주민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울시는 쪽방촌의 월세 상승을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쪽방 건물에 한해 저렴쪽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시나요?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p>
<p>개발과 공공주택 사업</p>	<p>*현재 동자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혹은 대안은 무엇인가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동자동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시나요. *동자동은 한 때 지금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동자동 쪽방촌 일부가 이미 개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제퇴거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자동이나 이전의 주거지에서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활동을 이어나가며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나 그 속에서 발견하는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일하는 곳이나 사는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이 많아요. 세입자를 비롯해 상가, 홀리스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이 자꾸만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p>

선전선동 가이드

좋은 선전선동을 하려면

흔히 '선동'이란 단어를 접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전선동'이란 본래 어떤 의미를 지닌 말이었을까요? <경찰학사전>에서는 선전선동을 아래와 같이 정의 내립니다.

'선전이란 어떤 사실이나 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지시켜 이해를 촉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선동이란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를 조장케 할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위의 정의에 따라 생각해보면 결국 선전선동이라는 행위는 말과 글과 몸짓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의 동기부여와 결의를 고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잘 생각해보면 가장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라 여겨지는 선전전이나 피켓시위부터, 집회의 발언이나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넓게는 학회의 세미나나 나아가 선후배나 동기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어쩌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선전선동이란 실은 특별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말, 글, 몸짓 등)을 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좋은 선전선동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선전선동을 잘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설득력 있는 열개, 귀에 꽂히는 목소리 톤과 단어 선정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더불어 구체적인 선전선동의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선전전이나 대자보처럼 짧은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표현 배치가 중요하겠고, 세미나에서는 화려한 수사보다는 논리적 모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열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선전선동을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다가 부담이 되어서 정작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15) 신현종 외 8명 2012, <경찰학사전>, 법문사

실전 선전선동을 위한 팁

선전전의 대상은 빠르게 지나가는 행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발언은 되도록 핵심을 간취하여 쉬운 언어, 짧은 길이로 반복해 이야기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좋은 예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호객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많지 않은 인원으로 유인물을 배포 할 때는, 2인 1조를 기본으로 유인물 배포와 선동 진행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의 선동 역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적당한 큰 목소리와 쉬운 언어로 핵심만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창피하다는 생각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에 자신감 있게 당당히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①선동문을 쓸 때부터 구어체로

선동문은 내가 들려줄 말을 미리 적은 것입니다. 즉, 보여줄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평소애 친구와 대화하며 ‘이런’, ‘그러므로’, ‘~할 따름이다.’ 등등의 말을 쓰지 않지요. 우리는 글을 쓸 때 문어체에 익숙하지만, 선동문은 들려줄 말이라 생각하며 써봅시다.

②구체적이고 쉽게

문체만 일상적이라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구체적이되 쉬워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을 쓰도록 노력해봅시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③설명이 아닌 선동

사람들은 예상치 않게 들려오는 ‘설명’을 귀 기울여 듣진 않습니다.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은 피하도록 합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상황과 쟁점 설명이 들어갈 순 있지만 이 역시도 일부로써 들어가야 합니다. 적절히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말’만 선동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적합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자면, 발언 내용이 힘찬 내용일 때는 “동지들~ 힘드신가요? 박수 세 번 치면서 힘 내도록 합시다! 박수 세 번 시작! 짹짹!”과 같은 호응 유도도 좋겠지요.

④기승전결

내용상의 기승전결과, 형식상의 기승전결 모두를 의미합니다. 실제 선동을 할 때 듣는 사람에게도 시작과 고조, 결론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승전결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발언자의 억양, 말투, 호흡 등을 조절하며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선동문을 썼다면 그걸 연극 대본의 지문처럼 어떤 식으로 발언할 것인지 메모를 해두고, 연습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⑤소리 내어서 읽기

선동문 작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꼭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글로 쓸 때와는 다르게 어색한 표현이나, 과도하게 긴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소리 내어 읽는 과정 없이 선동문을 그대로 발언하다 보면 호흡이 부족할 때도 있고, 내가 쓴 선동문인데도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위의 과정에 잘 부합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3. 구호 배우기

집회·시위에 사용되는 구호는 여러 리듬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구호를 배워봅시다.

● 끝 구호 세 번 외치기

집회·시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선동자가 외치는 구호의 마지막 4음절을 따라서 세 번 외칩니다. 어절의 리듬에 맞춰 팔뚝질까지 해주면 베스트!

선동자 : “주민들 내쫓는 ○○구청 규탄한다!”

일동 :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투쟁!”으로 마무리. 때에 따라 “민중권력 쟁취! 투쟁!” 등 대오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호를 만들어봅시다

일반적으로 4·4·4·4 음절이 많이 쓰입니다. 4음절을 벗어나는 경우 발음의 길이를 조절해 박자를 맞춥니다. 단, 마지막 어절은 함께 외치는 구간이니 4음절을 유지하면 좋겠지요?

예시)

대	책	없	는		개	발	허	가		서	울	시	를		규	탄	한	다					
집	-	은	-		생	명	이	다		주	거	권	을		보	장	하	라					
뺏	지	도	-		빼	앗	기	지	도	말	자		평	등	한	도	시	를		쟁	취	하	자

연습) 빈할 기간 중 함께 외칠 구호를 만들어 봅시다

● 8박자 구호

8음절의 구호 사이사이마다 박수를 쳐서 리듬을 맞추는 구호입니다. 행진시에 힘차게 진행하기 좋습니다.

선동자 : “강제철거 중단하라! 8박자 구호 시~작~!”

일동 : “강제철거 중단하라! 강제철거 중단하라!”

“강 ㄱ 제 ㄷ 철 ㄱ 거 ㄱ 중 ㄱ 단 ㄱ 하 ㄱ 라 ㄱ”

“강제 ㄱ 철거 ㄱ 중단 ㄱ 하라 ㄱ”

“강제철거 ㄱ 중단하라 ㄱ”

“강제철거 중단하라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투쟁!”으로 마무리)

● 뺏다 구호

선동자 : “강제철거 중단하라, 뺏다 구호 시~작~!”

일동 : “강제철거 중단하라! 강제철거 중단하라!”

“강제~철거! 중단~하라! 그래~맞아! 강제철거 중단해!” (폴짝폴짝)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울랄라랄라 중단해!” (빙글빙글 돌거나 어깨춤)

(이하 8박자 구호 진행)

하루 평가 가이드

하루 평가, 이렇게 해봅시다

하루 평가 형식은 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고 평가하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집니다. 일정 중에도 필기도구를 지참해 각 일정마다 생겨나는 고민, 조원과 나누고 싶은 지점을 메모해 하루 평가 시간에는 공동의 쟁점을 추려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삶에서 꼭 가져가고 싶은 부분, 감동적인 발언이나 주요한 선전선동 지점들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편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불만을 증폭하는 논의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평가를 해봅시다. 평가 자리가 더 나은 내일 일정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함께 만드는 빈활, 함께 만드는 평등약속

평등약속은 전 빈활 기간에 걸쳐, 모든 참가단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각 조별활동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평가에서 평등약속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평가하고, 조별활동에 있어 전체 평등약속의 부족한 부분이나 강화할 수칙이 있다면 이를 조별 수칙으로 함께 정하고 실천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 규칙이자 실천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상호 토론을 거쳐 해결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합니다.

6월 28일(수)

01 오늘 우리의 활동은(20분)

- 오늘 하루 프로그램과 실천 활동은 어떠했나요.
- 간담회, 강연, 지역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고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 선전전, 집회를 통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나요.

02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한 빈활(10분)

- 오늘 일정에서 평등과 관련해 고민이 있었다면 이야기 나눠봅시다.
- 앞으로 서로 지키고 고민할 점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03 하루 총평(10분)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오늘 하루에 대한 총평을 1분 이내로 이야기합니다.

6월 29일(목)

01 오늘 우리의 활동은(20분)

- 오늘 하루 프로그램과 실천 활동은 어떠했나요.
- 간담회, 강연, 지역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고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 선전전, 집회를 통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나요.

02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한 빈활(10분)

- 오늘 일정에서 평등과 관련해 고민이 있었다면 이야기 나눠봅시다.
- 앞으로 서로 지키고 고민할 점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03 하루 총평(10분)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오늘 하루에 대한 총평을 1분 이내로 이야기합니다.

흥얼흥얼 노래집

우리가 바꾼다

작곡 노들노래공장
작사 윤영

세상살이 고달프다 올 수만은 없다
가난해도 남 것 뺏고 살아본 적 없다
용기를 모으면 힘이 생긴다
힘 같이 모으면 세상 바뀐다

우리는 반대한다 불평등
우리는 반대한다 전쟁을
우리는 반대한다 민영화
우리는 반대한다 강제퇴거

욕심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불태운다
좀 더 나은 내일은 우리가 만들자
용기를 모으면 힘이 생긴다
힘 같이 모으면 세상 바뀐다

우리는 요구한다 평등을
우리는 요구한다 평화를
우리는 요구한다 존중을
우리는 요구한다 주거권

우리는 요구한다 빈곤철폐

동지가

박철환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 보았다

살을 에는 밤 고통 받는 밤
차디찬 새벽 서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통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당당하게)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동지여 (동지)
투쟁 (나의 동지)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동지들과 함께 선다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리
이젠 절망, 두려움 다 버리고서
나가리라
우리들의 단결로 이제는 해방 (해방으로)
우리는 영원한 동지

길 그 끝에 서서

글 박현욱 / 곡 지민주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걸어온 거야
언제나 길의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온 길을 만들어 온 것처럼

눈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먼저 간 사람들의 빛을 따라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차례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바위처럼

꽃다지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얇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 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처음처럼

조국과 청춘

한판 싸움이 다가올수록
우리 가슴은 처음처럼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처음처럼 뜨겁게
두근거리던 처음의 마음
우리 투쟁으로 희망이 됐고
지금도 처음이라고
아아아 여긴다면은
날마다 희망이래오
저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지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룻밤의 꿈이라는 걸
동지들아 몰아쳐 가자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두근거리던 처음의 마음
우리 투쟁으로 희망이 됐고
지금도 처음이라고
아아아 여긴다면은
날마다 희망이래오
저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지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룻밤의 꿈이라는 걸
동지들아 몰아쳐 가자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길 나서기 전에 부르는 노래

황푸하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됐나요
헤어지기 전에 내 손 꼭 잡아줘
내가 강해져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잠시 동안만 이렇게 손 잡고 있자

단결투쟁가

꽃다지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깎어 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갇혀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수천의 산맥 넘고 넘어
망치되어 죽창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필코 가리라
거짓 선전 분열의 음모
깎어 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해방의 깃발 들고 우리는 간다
아-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 뿐 이다

연대투쟁가

윤민석

연대의 깃발을 올려라 총진군이다
머리띠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후퇴도 모른다
강철같은 연대투쟁 전진 뿐이다
그래 너희에겐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게 신념과 의리로 뭉친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MEMO

